제218차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보 고 안 건 (218차 -01)

2022년('21년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2022. 4. 15.

행정안전부

목 차

Ⅰ. 합동평가 개요 ····· 1

Ⅱ. 2022년 합동평가 결과 종합 ····· 2

Ⅲ. 국정목표별 평가 결과 ····· 3

① 국민이 주인인 정부 ····· 3

② 더불어 잘 사는 경제 ····· 4

③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 5

④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 7

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 8

Ⅳ. 국민평가단 우수사례 선정 결과 ····· 10

Ⅴ. 향후 추진일정 ····· 10

[붙임1] 2022년('21년 실적) 합동평가 결과 ····· 11

[붙임2] 국민평가단 우수사례 주요내용 ····· 12

[붙임3] 2022년('21년 실적) 합동평가 지표현황 ····· 13

[붙임4] 2021년 합동평가 결과 사후관리 및 정책환류 ·· 18

[붙임5] 2021년 합동평가 결과 정책환류 세부내용 ···· 20

2022년('21년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Ⅰ 합동평가 개요

○ (평가근거)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1조

*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지자체를 대상으로 행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평가

○ (평가대상) 17개 시·도(시·군·구 실적 포함) ※ 市部와 道部를 구분하여 평가

○ (평가지표) 5대 국정목표, 108개 지표(정량 87개, 정성 21개)

총계	①국민이 주인인 정부	②더불어 잘사는 경제	③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④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⑤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108	7 (6.5%)	16 (14.8%)	52 (48.1%)	28 (25.9%)	5 (4.7%)

○ (평가기간) '22.1 ~ 3월(실적기준일: '21.1.1.~'21.12.31.)

○ (평가방법) 국정목표별로 개발된 정량·정성지표에 대한 평가 실시

- (정량평가) 지표별로 시·도별로 부여된 목표치 달성여부 평가(절대평가)
- (정성평가) **합동평가단***에서 **21개 지표별 우수사례** 선정(시·도부 각 2건**, 총 83건)

  * 학계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 정량평가 최종검증 및 정성평가 수행

  ** 부분평가 1개(3-3-8-가. 연안사고 예방활동 추진)는 시부1건, 도부 2건 선정
- (국민평가) 시·도에서 각 2건씩 제출한 **정성평가 우수사례 총 34건**에 대해 **국민평가단**에서 평가하여 **10건 선정**(시·도부 각 5건)

  ※ 17개 시·도별 12명씩 선발(총 204명), 해당 거주지역 우수사례 평가제외

《 2022년('21년도 실적) 합동평가 특징 》

❖ (**지자체 평가부담 완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대면서비스 중단, 방역 업무 과중 등 지자체 상황을 고려한 평가지표(33개) 조정

❖ (**평가기간 단축 정착**) 지자체·중앙부처가 평가결과를 당해연도 업무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실시 및 결과공개 조기 추진체계(7월→4월) 정착

❖ (**국민평가 개선**) 국민평가단 규모를 확대(102명→204명)하여 국민의 눈높이에서 평가

Ⅱ 2022년('21년도 실적) 합동평가 결과 종합

○ (정량평가) 전체 목표달성도 상승, 전년대비 3.6%p 증가한 88.9%에 달하며, 17개 시·도 중 **14개 시·도의 목표달성도가 상승**

※ 시부 평균 85.7%(전년 대비 ↑2.6%p), 도부 평균 91.7%(전년 대비 ↑4.5%p)

- (시부 달성도 상위) 광주·울산(92.9%), 대전(89.3%)
- (도부 달성도 상위) 전남(95.4%), 경기·경남(94.3%)

※ 전년도 평가 상위 지자체 : 시부(세종, 울산, 대전), 도부(경남, 제주, 강원·전북)

- (실적상승도 상위) 전남(↑10.8%p), 광주(↑10.2%p), 경기(↑9.6%p)

○ (정성평가) **일부 지자체에 우수사례가 집중**되는 경향*이 보이며, 우수사례 선정 상위 지자체에 크게 변동이 없는 시부에 비해 도부의 경우 상위 지자체의 변동이 있는 편

* 상위 4개 지자체 우수사례 선정비율 : ('20) 53.6% → ('21) 41.1% → ('22) 51.8%

※ 시부 상위 지자체 : ('20)대구·광주 → ('21)대구·대전 → ('22)대구·대전
도부 상위 지자체 : ('20)경북·충남 → ('21)경북, 경기·전남 → ('22)경기·제주

- (시부 선정 건 상위) 대구(12건), 대전(10건), 울산(7건)
- (도부 선정 건 상위) 경기(13건), 제주(8건), 충북(4건)

※ 전년도 평가 상위 지자체 : 시부(대구, 대전, 울산), 도부(경북, 경기·전남)

- (실적상승도 상위) 경기(↑31.1%p), 전북(↑19.0%p), 인천(↑11.0%p)

○ (국민평가) 우수사례로 **총 10건**을 선정(시·도부 각 5건)

- (시부) 서울(2건), 인천·광주·울산(1건) / (도부) 경기(2건), 강원·충남·제주(1건)

《 국정목표별 목표달성도 현황 》

구분	①국민이 주인인 정부	②더불어 잘사는 경제	③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④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⑤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22년 평가 (88.9%)	92.6%	87.9%	90.7%	88.7%	72.1%
'21년 평가 (85.3%)	92.2%	81.9%	85.9%	89.6%	56.9%
'20년 평가 (83.6%)	90.2%	83.1%	83.7%	85.6%	66.7%

Ⅲ 국정목표별 평가 결과

1 국민이 주인인 정부

○ **지표현황** : 총 7개 지표 (정량 4개, 정성 3개)

-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지자체의 공공저작물 개방 및 활용지원,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보훈정신 확산 지원 등

○ **평가결과**

- (정량) 17개 시·도의 **평균 목표달성률은 92.6%**로 **전년(92.2%) 대비 0.4%p 증가**하였으며, **12개 시·도**에서 **목표를 100% 달성**

  * 평균 목표달성률 : 시부 87.5%, 도부 97.2%

- (정성) 자원봉사 활성화 등 3개 지표에서 **총 12건**의 우수사례 선정

구분	정량평가	정성평가
시부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100%)	대구 3건, 인천 · 대전 · 울산 각 1건
도부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경북 · 경남 · 제주(100%)	경기 3건, 제주 2건

○ **주요 추진성과**

❖ 주민주도형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 조성 및 지역맞춤형 보훈정신 확산 지원
❖ 국민편의를 위한 지방행정 효율화 및 열린 행정서비스 구현

- (**자원봉사 활성화**) 코로나19 상황에서 **자원봉사 방식의 다양화를 위한 환경을 마련**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비공식적 지원체계로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담당

  ※ 대전(사랑의 리빙랩, MZ세대 청년자원봉사단 운영 등), 경기(비대면 프로그램 관리체계 확립), 대구(기후대응관련 자원 봉사활동 기획 등)

- (**보훈정신 확산**) 국가유공자 예우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보훈가족 생활지원 강화, 지역 특색 및 보훈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울산(지역 출신 호국인물 박상진의사 관련 기념사업 실시), 제주(제주해녀의 항일활동관련 프로그램 개발, 국가유공자 주거여건개선사업 지속 추진 등)

- (**지방행정 효율화**) 처리과별 기록관리기준표 관리운영 성과 지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률은 **전 지자체에서 달성**하여 지자체 **공공기록물의 효율적 활용** 및 **지방행정의 편의성 증진**에 기여

- (**열린 행정 서비스**) 민간 수요가 많은 다양한 형태의 지자체 공공 저작물을 개방하고 이용활성화를 통해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

  * 대구(시민과 함께 만든 글자체 및 지역안내지도를 1유형으로 개방)
    경기(도 문화유산·지역자원을 활용한 디자인 및 캐릭터 1유형 개방 등)

○ **보완·개선사항**

- 정량지표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고, 전반적인 지방행정 서비스의 향상으로 목표달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 향후 **적극적인 목표설정 필요**

2 더불어 잘 사는 경제

○ **지표현황** : 총 16개 지표 (정량 16개)

- 공공 취업지원 서비스 및 경력단절여성 구직 발굴 목표 달성률, 특수거래분야 법집행 실적 점검, 중앙부처 건의 규제 발굴·개선 등

○ **평가결과**

- (**정량**) 17개 시·도의 **평균 목표달성률은 87.9%**로 **전년(81.9%) 대비 6%p 증가**하였으며, **13개 시·도의 달성률이 상승**하였음

  * 평균 목표달성률 : 시부 85.9%, 도부 89.6%

구분	정량평가
시부	울산(100%), 대구·광주·대전(93.8%)
도부	전남·경남·제주(100%)

○ **주요 추진성과**

❖ 소비자 피해 예방 및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기여
❖ 친환경 미래에너지 및 신기술 육성 등을 통해 미래 성장기반 구축

- (**소비자 보호**) 다단계, 방문판매 등 특수거래분야에 대한 지자체의 대응(시정,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등) 실적은 **전 지자체에서 목표를 달성**하여 서민·취약계층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도모

- (**규제 발굴·개선**) 중앙부처 건의과제 및 중기부(옴부즈만) 지방 규제애로 발굴·개선 실적 개선율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여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개선** 측면에서 큰 성과 도출

  * 중앙부처 건의과제 발굴·개선 : 목표 398건 대비 2,539건 실적 달성
  * 중기부(옴부즈만) 지방 규제애로 발굴·개선 : 목표 1,540건 대비 4,999건 실적 달성

- (**신산업 육성**) 재생에너지 비중 및 수소충전소 설치 이행을 확대하여 **친환경 미래에너지를 육성**하고, 지자체의 중소기업 신기술제품 구매를 유도하여 **중소기업 혁신성장 기반 구축**에 기여

  * 목표달성 지자체 수 :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21년) 13개 → ('22년) 16개)
    신기술제품 우선구매율(('21년) 11개 → ('22년) 14개)

○ **보완 · 개선사항**

- 코로나19로 인한 대면서비스 제약 및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일부 일자리 관련 지표의 목표치를 조정하였으나, 실적 향상 저조

  * (공공취업지원) 6개 지자체 미달성, (경력단절여성 구직발굴) 4개 지자체 미달성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 **지표현황** : 총 52개 지표 (정량 41개, 정성 11개)

- 다함께돌봄센터 확충률 및 이용률, 아이돌봄 서비스 제고, 가족역량강화 지원율, 보호대상아동 지원 내실화율, 지역건축센터 설치 운영 및 건축안전 수준 평가, 온실가스 감축 등

○ **평가결과**

- (**정량**) 17개 시·도의 **평균 목표달성률은 90.7%**로 **전년(85.9%) 대비 4.8%p 증가**하였으며, **13개 시·도의 달성률이 상승**하였음

  * 평균 목표달성도 : 시부 87.5%, 도부 93.5%
  * 특히, 충북(↑11.4%p)과 인천(↑9.7%p)에서 높은 향상도를 보임

- (**정성**) 저출산대책 우수사례 등 11개 지표에서 **총 43건**의 우수사례 선정

구분	정량평가	정성평가
시부	광주(95.1%), 울산(92.7%)	대구 · 대전 각 5건
도부	전남(100%), 충북(97.6%)	경기 7건, 제주 5건

○ 주요 추진성과

❖ 지역 내 양육환경조성 및 주거지원 등을 통한 저출산 극복 지원
❖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체계 구축을 통한 국민생명 보호

- (저출산 극복)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율 및 다함께돌봄센터 확충률 및 이용률 제고**를 통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양육환경 조성

- (**취약·위기가정 지원**) 가정위탁보호 및 보호대상아동 지원 내실화*, 가족역량 강화 관련 지표를 **대부분의 시·도에서 목표치를 달성**함으로써 가족기능회복 및 자립역량 강화

  * 보호종료아동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보호대상아동의 경제적 자립기반 형성 관련 지표로 전 지자체에서 목표 달성,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 자립 지원 강화

- (**주거복지 향상**) 지역 내 주거실태 파악을 통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취약계층 주거지원 실적 점검 등 **주거복지 추진체계 확립**

  * 대전(시민참여형 청년주택 공급모델 워킹그룹 운영), 전북(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 (**질병 예방·관리 강화**) 코로나19 대응으로 보건소의 업무가 상당부분 중단되었음에도, **지역사회 치매관리율·결핵환자 접촉자 잠복결핵감염 검진율**은 모든 **시·도에서 목표치를 달성**

- (**안전한 사회**) **산재 사망사고 감축 및 안전사고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지자체 수행·발주공사 안전관리 강화 및 지역건축센터 설치 운영 등 안전관리 지표도 **대부분의 시·도에서 목표 달성**

- (**기후위기 대응**)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률 제고, 탄소포인트제 참여 가구수 증대 지표의 경우 대부분의 시·도가 목표를 달성**하여 저탄소생활 실천문화 확산 및 신기후체제 이행에 대한 국민의식 제고

  * '21년 탄소포인트제 참여 가구 수는 총 3,253,829 가구로 전년 대비 약 5% 증가

○ 보완 · 개선사항

- **코로나19로 인한 지표조정***(평가유예, 목표치 하향 등)이 제일 많이 이루어진 분야로, 향후 상황 변화에 따라 조정된 지표들에 대한 적절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표 및 목표치 설정 필요**

  * 조정된 총 33개 지표 중 58%(19개)가 해당 분야(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에 집중

④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 **지표현황** : 총 28개 지표 (정량 22개, 정성 6개)

- 도로 표지판 정비 및 상세주소 부여, 대학 및 지자체 연계·협력, 임도시설 실적 및 산림자원육성 달성률 관리,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 등

○ **평가결과**

- (정량) 17개 시·도의 **평균 목표달성률은 88.7%**로 유일하게 **전년(89.6%) 대비 0.9%p 감소**한 분야로, **7개 시·도의 달성률이 하락**하였음

  * 평균 목표달성도 : 시부 85.7%, 도부 91.3%

- (정성) 옥외광고물 정비 및 활용, 지방예산낭비 방지 및 절감 우수사례 등 6개 지표에서 **총 24건**의 우수사례 선정

구분	정량평가	정성평가
시부	대전(100%), 세종(90%)	대구 4건, 대전 3건
도부	전북(100%), 충남(95.5%)	경기 3건, 전북·전남 각 2건

○ **주요 추진성과**

❖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 및 민-관 상호 협력체계 구축
❖ 지역 특성에 따른 다양한 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균형발전 도모

- (**주민자치 활성화**) 지자체가 주민의 다양한 비대면 활동을 발굴하고, 주민주도의 사업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주민자치에 대한 인식 확대**에 기여

  * (강원) 폐광 이후 빈집 증가, 주민주도로 '마을호텔 18번가' 조성
    (대전) 마을단위의 탄소중립 실천사례 제시, 탄소중립 리빙랩 추진

-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보조금의 체계적 관리**,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의 **주민참여 확대** 등을 통해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 제고

-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옥외광고물 정비를 위한 지자체의 다양한 노력을 통해 **시민안전 및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

  * 신규업소 허가관련 부서와 연계한 사전경유제 및 디지털 사이니지 기술을 활용한 전자게시대, 자동경고 서비스 등

- (**생활편의 도모**) 도로표지판 정비 및 원룸·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상세주소 부여 등 전 지자체에서 도로명 관련 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여 **도로명주소의 정착 및 국민 편익 증진**

  * 도로명판 확충, 도로명 방식으로 도로표지판 정비, 상세주소 부여실적

- (**농업 경쟁력 제고**) 전년도에 전 지자체가 미달성했던 쌀 적정생산 유도 지표의 경우 목표치 조정 등으로 인해 **목표달성률이 제고** 되었고, **친환경농업기술 실천농가 확대**로 **농업경쟁력 확보**에 기여

- (**동물보호 문화 확산**)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는 문화 조성을 위한 반려견 정책의 핵심인 반려동물 등록 지표는 **전 지자체에서 목표달성**

  * 반려동물 등록 목표를 123% 초과 달성, '21년 말 기준 **총 2,878,481마리 등록**

○ **보완 · 개선사항**

- (**산림보전 및 관리**) 산림보호 및 산림자원 육성 지표의 목표달성률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올해 발생한 산불피해 복구를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 필요

  * 산불방지달성도 평균 목표달성률 : '21년(97%) → '22년(98%)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육성 평균 목표달성률 : '21년(99%) → '22년(98%)

- (**가축전염병 예방**) **우제류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 감소율** 및 **닭오리 가축전염병 발생률** 지표는 **전년에 비해 실적이 부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지자체의 관심 유도 필요

  * (우제류 가축전염병) '21년 3개 지자체 미달성 → '22년 7개 지자체 미달성
    (닭오리 가축전염병) '21년 2개 지자체 미달성 → '22년 6개 지자체 미달성

5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 **지표현황** : 총 5개 지표 (정량 4개, 정성 1개)

- 충무계획 실효성 제고 및 비상대비훈련 우수사례, 관리적 · 기술적 정보보안 수준 개선, 사이버위기대응 역량수준 개선 등

○ 평가결과

- (정량) 17개 시·도의 **평균 목표달성률은 72.1%**로 **전년(56.9%) 대비 15.2%p 증가**하였으며, **14개 시·도의 달성률이 상승**하였음

  * 평균 목표달성도 : 시부 65.6%, 도부 77.8%

- (정성) 충무계획의 실효성 제고 및 비상대비훈련 우수사례 1개 지표에서 **총 4건**의 우수사례 선정

구분	정량평가	정성평가
시부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울산 · 세종(75%)	서울 · 대전 각 1건
도부	경기(100%),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75%)	강원 · 전남 각 1건

○ 주요 추진성과

❖ 국가 위기 상황에 대응한 지역 맞춤형 비상대비태세 확립
❖ 사이버위협 등 보안 사고 대응을 위한 정보보안 역량 강화

- (위기상황 대응) 안보 및 재난 위기상황 극복 훈련을 통한 **지자체의 기능유지 및 주민생활 안정 확보**를 위한 **지역 맞춤형 대응방안 마련**

  * (전남) 비전투원(외국인) 후송작전 충무계획 반영 (서울) 민·관·군 합동 긴급교량복구훈련 실시

- (정보보안 역량 강화) 관리적 정보보안 및 사이버위기대응 역량 수준 목표달성률이 **전년보다 크게 상승**하여 **지자체 정보보안 수준 개선**

  * (관리적 정보보안) '21년 53%→'22년 88%, (사이버위기대응) '21년 35%→'22년 94%

-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대부분의 지자체가 목표치를 달성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자체 역할·책임 강화**

○ 보완·개선사항

- 지자체의 정보보안관련 지표의 목표달성도가 크게 향상되었음에도, **기술적 정보보안 분야**의 경우 대부분의 지자체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바, 취약요소 개선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 필요

  * (기술적 정보보안) '21년 3개 지자체 미달성 → '22년 15개 지자체 미달성

Ⅳ 「국민평가단 우수사례」 선정 결과

○ **(평가대상)** 시·도가 선정하여 제출한 정성평가 **우수사례 총 34건**

○ **(평가주체) 국민평가단 154명**(총 204명 중 응답률 75.5%)

※ 2021년 평가 : 총 102명 중 60명 응답(응답률 58.8%)

○ **(선정방법)** 사례별로 참신성, 파급효과, 체감도, 지자체 노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점 척도***에 따라 점수 부여(해당 거주지역 평가제외)

* 탁월(5), 우수(4), 보통(3), 미흡(2), 매우미흡(1)

○ **(선정결과)** 10건(서울·경기 2건, 인천·광주·울산·강원·충남·제주 각 1건)

순위	시도명	우수사례명	구분
1	서울	지방출신 대학생을 위한 역세권청년주택 공공기숙사 운영	시부
2	광주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맘 편한 광주	
3	서울	투명 페트병의 재탄생 투명 페트병을 옷입는 서울	
4	인천	인천형 자원순환, 폐플라스틱에 새 생명을 불어넣다	
5	울산	주민이 낸 주민세, 울산이 돌려줌세	
1	충남	갯벌 인명구조시간 5배 단축, 연안사고 예방정책 전국 선도!	도부
2	제주	탈플라스틱 열풍 제주 친환경 제품으로 탈바꿈 위해 다시 뭉쳤다	
3	경기	지역순환형 재활용제품 활성화로 자원낭비DOWN자원순환UP	
4	경기	생애주기별 따뜻한 집이 온다	
5	강원	잘 버린 플라스틱의 아름다운 귀환	

Ⅴ 향후 추진일정

○ 합동평가 **결과보고서** 및 **우수사례집** 발간(~7월)

○ 지자체 **맞춤형 행정컨설팅 실시**('22년 하반기)

- 평가결과 부진분야(지표)에 대해 시·도별 맞춤형 컨설팅 실시

○ '22년 지자체 합동평가 **유공자 포상**('22년 하반기)

※ ('21년 포상규모) 훈장1, 포장1, 대표9, 국표9, 장관표창 49

붙임1 2022년('21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

1. 국민이 주인인 정부(7개 지표 : 정량 4개, 정성 3개)

구분	목표달성도	우수사례
시부	광주・대전・울산・세종(100%)	대구 3건, 인천・대전・울산 각 1건
도부	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경북・경남・제주(100%)	경기 3건, 제주 2건

2. 더불어 잘 사는 경제(16개 지표 : 정량 16개)

구분	목표달성도
시부	울산(100%), 대구・광주・대전(93.8%)
도부	전남・경남·제주(100%)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52개 지표 : 정량 41개, 정성 11개)

구분	목표달성도	우수사례
시부	광주(95.1%), 울산(92.7%)	대구・대전 각 5건
도부	전남(100%), 충북(97.6%)	경기 7건, 제주 5건

4.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28개 지표 : 정량 22개, 정성 6개)

구분	목표달성도	우수사례
시부	대전(100%), 세종(90%)	대구 4건, 대전 3건
도부	전북(100%), 충남(95.5%)	경기 3건, 전북・전남 각 2건

5.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5개 지표 : 정량 4개, 정성 1개)

구분	목표달성도	우수사례
시부	부산・대구・인천・광주・울산・세종(75%)	서울・대전 각 1건
도부	경기(100%),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75%)	강원・전남 각 1건

붙임2 국민평가단 우수사례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서울	□ **지방출신 대학생을 위한 역세권청년주택 공공기숙사 운영** ○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양질의 임대주택(공공+민간)을 공급 ○ 9개 참여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입주학생은 임대료와 월세 없이 관리비만 부담
서울	□ **투명 페트병의 재탄생 투명 페트병을 옷입는 서울** ○ 시-구-민간기업의 업무협약을 통해 투명 페트병 재활용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투명 페트병 재활용한 재생 섬유 '리젠서울' 제품 출시 ○ 투명 폐페트병 약 427톤을 재활용하여 약 118톤의 재생섬유 생산
인천	□ **인천형 자원순환, 폐플라스틱에 새 생명을 불어넣다** ○ 전국 최초 버려지던 플라스틱 완구류를 재활용하여 네임텍을 제작하였으며, 인천형 자원순환가게 17개소 및 캠페인을 통해 시민이 주도하는 자원순환 실천 ○ 폐합성수지류 165톤 수거 및 자원순환가게 1,244세대 가입으로 주민참여 제고
광주	□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맘 편한 광주** ○ 전담조직 신설 및 추진체계를 정립하여 생애기주기별 6단계 정책 지원에 6개 부서, 28개 시책을 마련하였고 시민 접점 밀착홍보 실시 ○ 전국 유일 전년 동월 대비 출생아수 10개월 연속 증가
울산	□ **주민이 낸 주민세, 울산이 돌려줌세** ○ '울산형 마을뉴딜사업' 수립 및 시민이 주도하는 '시민 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을 통해 주민이 직접 발굴하고 해결하는 주민숙원사업 실시 ○ 주민세 전액(39억 1,200만원)을 환원하여 132개 지역 숙원사업 선정
경기	□ **생애주기별 따뜻한 집이 온다** ○ '아동,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장애인' 4단계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소외되는 계층없이 촘촘한 주거복지 지원 ○ 안정적인 주거생활 영위를 위한 주거비 절감, 주거환경 개선
경기	□ **지역순환형 재활용제품 활성화로 자원낭비DOWN자원순환UP** ○ 폐비닐, 폐아이스팩, 폐페트병을 활용하여 음식물쓰레기 보관용기, 가로수 보호판, 도로반사경, 볼펜 등 재활용품 생산 ○ 폐비닐 322톤, 폐플라스틱 3톤 재활용에 따른 탄소 645톤 저감
강원	□ **잘 버린 플라스틱의 아름다운 귀환** ○ 지역주민과 함께 플라스틱 수거체계를 구축하여 민간 재활용 업계와의 협업을 통해 고품질의 기념품 제작 ○ 1회용 컵, 페트병, 폐플라스틱으로 영농자재, 골프티, 우산, 수건 등 제작
충남	□ **갯벌 인명구조시간 5배 단축, 연안사고 예방정책 전국 선도!** ○ 갯벌 인명구조용 보드 제작·보급, 충남 해안선 24시간 감시 및 예찰용 적외선 CCTV도입, 인명구조용 드론 등 해양 안전관리 스마트화 추진 ○ 연안 안전관리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예산 증가(194%)로 안전강화
제주	□ **탈플라스틱 열풍 제주 친환경 제품으로 탈바꿈 위해 다시 뭉쳤다** ○ 1회용 컵 없는 매장 시범운영(스타벅스), 제주개발공사(삼다수) 페트병 리사이클 시스템 마련 등 민관협업을 통한 친환경 제주를 위한 노력 ○ 통합보상제를 통한 페트병 배출량 42% 및 재활용품 회수량 10% 증가

붙임3 2022년('21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현황

□ 지표체계 : 5대 국정목표 116개 지표

○ 신규지표 22개, 계속지표 94개 / 정량지표 94개, 정성지표 22개

신규지표 유예지표

연번	지표번호	지표명	소관부처
1	1-2-2-가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우수사례(정성)	행정안전부
2	1-3-1-가	공공저작물 개방 및 활용지원 우수사례(정성)	문화체육관광부
3	1-3-1-나	처리과별 기록관리기준표 관리·운영 성과	행정안전부
4	1-3-1-다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법제처
5	1-3-1-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률	행정안전부
6	1-3-4-가	보훈정신 확산 우수사례(정성)	국가보훈처
7	1-3-4-나	국가유공자 특별채용률	국가보훈처
8	2-1-1-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율	고용노동부
9	2-1-1-나	자치단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수행성과(자치단체 자체사업)	고용노동부
10	2-1-1-다	공공 취업지원 서비스 달성률	고용노동부
11	2-1-2-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집행률	보건복지부
12	2-1-3-가	경력단절여성 구직 발굴 목표 달성률	여성가족부
13	2-2-1-가	지역물가 안정관리 실적 (지방공공요금 기본요금 인상률)	행정안전부
14	2-2-3-가	특수거래분야(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법집행 실적	공정거래위원회
15	2-2-4-가	사회적경제 분야 우선구매율	국가보훈처 헹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16	2-3-3-가	경쟁제한적 자치법규(조례·규칙) 개선율	공정거래위원회
17	2-3-3-나	중앙부처 건의 규제 발굴 및 개선 실적	행정안전부

연번	지표번호	지표명	소관부처
18	2-3-3-다	중기부(옴부즈만) 지방 규제애로 발굴·개선 실적 (지방규제 신고센터)	중소벤처기업부
19	2-3-3-라	행태개선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실적	행정안전부
20	2-3-3-마	테마별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율	행정안전부
21	2-4-5-가	재생에너지 3020 및 수소경제 활성화 이행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22	2-5-1-가	혁신구매목표 달성 실적	조달청 기획재정부
23	2-5-2-가	신기술제품 우선구매율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24	3-1-1-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실적	병무청
25	3-1-1-나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및 수급자 사후관리	보건복지부
26	3-1-1-다	자활근로 참여자의 탈수급 및 취창업율 (자활참여자 성공율)	보건복지부
27	3-1-2-가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지도·관리 달성률	보건복지부
28	3-1-2-나	지역사회 치매관리율	보건복지부
29	3-1-3-가	방문건강관리사업 신규등록가구 적정관리 및 65세 이상 노인가구원 신규등록 실적	보건복지부
30	3-1-3-나	비만예방사업 우수사례(정성)	보건복지부
31	3-1-3-다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관리	보건복지부
32	3-1-3-라	65세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률	질병관리청
33	3-1-3-바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 실적	보건복지부
34	3-1-4-가	잠복결핵감염자 치료실시율	질병관리청
35	3-1-4-나	결핵환자 접촉자 잠복결핵감염 검진율	질병관리청
36	3-1-5-가	지역특화 주거복지사업 우수사례 선정(정성)	국토교통부
37	3-1-5-나	개별부동산 공시가격 신뢰성 확보 노력도	국토교통부
38	3-1-5-다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국토교통부
39	3-1-5-라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국토교통부
40	3-2-1-가	가정위탁보호 내실화율	보건복지부
41	3-2-1-니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보건복지부

연번	지표번호	지표명	소관부처
42	3-2-1-다	저출산 대책 우수사례(정성)	보건복지부
43	3-2-1-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율	여성가족부
44	3-2-1-마	다함께 돌봄센터 확충률 및 이용률	보건복지부
45	3-2-1-바	보호대상아동 지원 내실화율	보건복지부
46	3-2-6-가	청소년 주도성 강화 우수사례(정성)	여성가족부
47	3-2-6-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노력도	여성가족부
48	3-2-6-다	청소년안전망 운영 활성화 수준	여성가족부
49	3-2-6-라	청소년유해환경 감시체계 구축 및 운영실적	여성가족부
50	3-3-1-가	지방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율	행정안전부
51	3-3-1-나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및 건축안전 수준 평가	국토교통부
52	3-3-1-다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교통사고 발생률 감소율	행정안전부
53	3-3-2-가	민방위경보 운영관리 개선	행정안전부
54	3-3-2-나	민방위대(통리·기술지원대) 화생방 방독면 확보율	행정안전부
55	3-3-2-다	재난심리 지원 총괄체계 구축 및 운영	행정안전부
56	3-3-3-가	역학조사의 완성도	질병관리청
57	3-3-3-나	배출사업장 환경관리 개선도	환경부
58	3-3-3-다	입국자 추적조사 완료율	질병관리청
59	3-3-3-라	식중독 발생 관리율	식품의약품안전처
60	3-3-3-마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100인 미만 시설) 등록률	식품의약품안전처
61	3-3-3-바	지역사회 위해의료제품 수거·검사 실적	식품의약품안전처
62	3-3-5-가	주민 1인당 재활용품 분리수거량	환경부
63	3-3-5-나	폐합성수지 재활용제품 활용 우수사례(정성)	환경부
64	3-3-7-가	온실가스 감축 달성률	환경부
65	3-3-7-나	탄소포인트제 참여가구수 증가율	환경부
66	3-3-8-가	연안사고 예방활동 추진 우수사례(정성)	해양경찰청

연번	지표번호	지표명	소관부처
67	3-4-2-가	지방자치단체 수행·발주공사 안전관리 강화 실적	고용노동부
68	3-4-3-가	다문화가족지원 서비스 이용률(센터 신규 가입 및 이용률)	여성가족부
69	3-4-3-나	장애인공무원 채용 실적	행정안전부
70	3-4-3-다	가족역량강화 지원율	여성가족부
71	3-4-4-가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 목표 달성률	행정안전부
72	3-4-4-나	성별영향평가 정책 개선율	여성가족부
73	3-4-4-다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개선 우수사례(정성)	여성가족부
74	3-4-4-라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우수사례(정성)	여성가족부
75	3-5-1-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추진실적 달성도	문화재청
76	3-5-1-나	독서문화진흥 및 도서관 특성화 우수사례(정성)	문화체육관광부
77	3-5-1-다	쉽고 바른 공공언어 개선 행정 서비스 우수사례(정성)	문화체육관광부
78	3-5-1-라	문화누리카드 사업 예산 집행률	문화체육관광부
79	3-5-1-마	문화가 있는 날 정책추진 우수사례(정성)	문화체육관광부
80	3-5-6-가	스포츠강좌이용권 집행률	문화체육관광부
81	3-5-6-나	공공체육시설 내 장애인 생활체육인구 1,000명당 프로그램 개설 수	문화체육관광부
82	3-5-6-다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 및 운영개선 우수사례(정성)	문화체육관광부
83	4-1-1-가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마을자치 공동체 활성화 우수사례(정성)	행정안전부
84	4-1-2-가	보조금의 효율적 관리 및 평가체계 확립 우수사례(정성)	행정안전부
85	4-1-2-나	지방예산낭비 방지 및 절감 우수사례(정성)	행정안전부
86	4-2-1-가	옥외광고물 정비 및 활용 우수사례(정성)	행정안전부
87	4-2-1-나	도로명판 확충	행정안전부
88	4-2-1-다	도로명 안내표지 방식으로 도로표지판 정비	행정안전부
89	4-2-1-라	상세주소 부여 실적	행정안전부
90	4-2-1-마	지역통계 확충 실적	통계청

연번	지표번호	지표명	소관부처
91	4-2-1-바	대학 및 지자체 연계·협력 우수사례(정성)	교육부
92	4-2-2-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실적	국토교통부
93	4-3-1-가	빈집정비실적	농림축산식품부
94	4-3-1-나	산림보호 단속 및 복구 실적	산림청
95	4-3-1-다	산사태 예방・대응 체계 구축률	산림청
96	4-3-1-라	임도시설 실적률	산림청
97	4-3-1-마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육성 달성률	산림청
98	4-3-1-바	산불방지 성과 달성도	산림청
99	4-3-1-사	산림병해충방제	산림청
100	4-3-1-아	소외계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용 확대	산림청
101	4-3-1-자	목재산업 우수사례(정성)	산림청
102	4-3-2-가	벼 재배면적 감축 등 쌀 적정생산 유도	농림축산식품부
103	4-3-3-가	GAP 인증 농가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104	4-3-3-나	농지원부 정비율	농림축산식품부
105	4-3-3-다	친환경 농업기술 실천농가 비율	농촌진흥청
106	4-3-3-라	반려동물 등록률	농림축산식품부
107	4-3-3-마	우제류 주요 가축전염병(5종) 발생 감소율	농림축산식품부
108	4-3-3-바	소·돼지 구제역 항체양성률	농림축산식품부
109	4-3-3-사	검역병해충 예찰 및 방제 실적	농림축산식품부
110	4-3-3-아	닭·오리 가축전염병 발생률	농림축산식품부
111	5-1-1-가	충무계획의 실효성 제고 및 비상대비훈련 우수사례(정성)	행정안전부
112	5-1-1-나	관리적 정보보안 수준 개선율	국가정보원
113	5-1-1-다	기술적 정보보안 수준 개선율	국가정보원
114	5-1-1-라	사이버위기대응 역량 수준 개선율	국가정보원
115	5-2-3-가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지원 활동성과	통일부
116	5-2-5-가	통일공감대 확산 및 통일 역량 강화 노력(정성)	통일부

붙임4 **2021년('20년도 실적) 합동평가 결과 사후관리 및 정책환류**

1. 평가결과 사후관리

□ 우수 시·도 재정인센티브 부여

○ 지 급 일 : '21. 5. ~ 6.

○ 총지급액 : 17개 시·도 160억원

○ 지급기준 : 목표달성도 및 우수사례 선정 비율, 국민평가단 선정 우수사례 지급

- (정량지표) 달성지표 비율(1%당 7.87백만원)
- (정성지표) 우수사례 선정 비율(1%당 약 9.5백만원)
- (국민평가) 정성지표 중 국민평가단 우수사례 선정(1건당 20백만원)
- (노 력 도) 전년 대비 결과 증감률, 기준액 5억(정량 4억, 정성 1억)

□ 유공자 포상

○ 포 상 일 : '21. 12. 9.

○ 포상규모 : 69점

- 훈장 1, 포장 1, 대통령 표창 9, 국무총리 표창 9, 장관 표창 49

○ 포상기준

- 합동평가 평가결과 및 업무 기여도, 지역 균형 등을 고려하여 선정

□ 부진시책 행정 컨설팅 실시

○ 기 간 : '21. 9. ~ 11.

○ 대 상 : 17개 시·도(21개 지표, 135건 실시)

○ 방 법 : 지자체 신청을 받아 민간전문가(29명) 서면 컨설팅 실시

○ 주요내용 : 정성지표별 지자체 사례 분석·진단 및 개선방안 제안

□ 우수 사례집 및 종합결과보고서 발간·배부

○ 배부일시 : '21. 7월

○ 배포대상 :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등

○ 주요내용 : 발굴된 우수사례에 대해 자치단체 간 정보공유 및 확산

2. 부처별 정책환류 주요 내용

□ 정책 반영 및 제도 개선

○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외 13개 부처

○ (주요내용) 우수사례를 신규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의 사업방식 개선 등

□ 재정 인센티브 부여

○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외 6개 부처

○ (주요내용) 관련사업 예산(국고보조금) 배정, 포상금 지급 등에 반영 또는 참고 자료로 활용

□ 교육 및 컨설팅 실시

○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외 9개 부처

○ (주요내용) 담당자 교육 실시, 평가 결과 부진 지자체 현장 점검 및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지표 개선

○ (관련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외 6개 부처

○ (주요내용) 정책환경, 목표달성도 등을 고려한 목표치 변경 또는 지자체 노력도 등을 강화하기 위한 산식 조정 등 지표 개선

□ 우수사례 공유·확산

○ (관련부처) 행정안전부 외 7개 부처

○ (주요내용) 우수사례 확산을 위해 사례집 제작·배포 및 온·오프라인 홍보 실시

□ 포상 반영

○ (관련부처) 환경부 외 13개 부처

○ (주요내용) 각종 포상 시 평가 결과 반영 또는 참고자료로 활용

붙임5 2021년('20년도 실적) 합동평가 결과 정책환류 세부내용

< 총괄 >			
부처명	지표	환류 주요내용	비고
23개 부처	94개		
고용노동부	5	▪ 국정과제 추진상황 점검, 현장방문 지도 등 대응책 마련 ▪ 정규직 전환결정 지연기관 대상 전문컨설팅 실시(39개소)	
공정거래위원회	1	▪ 우수 지자체 포상금 지급 및 17개 시도 현장교육 실시	
교육부	1	▪ 지방대학 ·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분야 유공자 발굴 · 수상	
국가보훈처	2	▪ 우수사례를 참고로 보훈 선양 기록물 관리사업 기획	
국가정보원	3	▪ 중앙-공공기관 관리실태 평가에도 분기별 자체평가 도입 ▪ 지자체 자발적 보안수준 제고를 위해 지표 개선	
농림축산식품부	9	▪ 농어촌정비법 개정, 지자체 빈집정비계획 수립 의무화 ▪ 달성률 감안 농산시책포상금 지급 및 우수사례 공유	
농촌진흥청	1	▪ 친환경 농업기술 실천 확대를 위한 현장컨설팅 실시	
문화재청	1	▪ 실 집행 실적을 참고하여 22년 국고보조금 차등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5	▪ 문화가 있는 날 기획프로그램 추진 시, 지역 균형 고려 선정 ▪ 우수 지자체 운영사례 공유, 애로사항 청취 등 워크숍 실시	
법제처	1	▪ 필수조례 마련 판단기준(구분) 등 지표 개선	
병무청	1	▪ 방역인력 등 사회복무요원 추가배치로 지자체 수요 확대	
보건복지부	8	▪ 지역사회서비스 현황분석 및 신규서비스 개발 등에 활용 ▪ 각 지역의 인구특성과 생애주기별 정책 추진 지원 ▪ 노인일자리 운영 우수사례를 자료집으로 제작, 사업 성과 제고	
산림청	8	▪ 임분 수종 갱신 판정표 개정 및 친환경 벌채요령 개선 ▪ 산림병해충 피해지역 확산 추세 감안, 평가지표 개선	
산업통상자원부	1	▪ 기본계획 수립 시, 지자체별 현황 등 고려하여 충전소 배치	
식품의약품안전처	2	▪ 급식 지원율 제고를 위해 '21년 목표치 차등 설정	
여성가족부	9	▪ 아이돌봄서비스 개선방안 수립 시 참고자료로 활용 ▪ 지자체 취약 위기가족 지원율을 신규사업 추진기관 선정 시, 반영	
조달청	1	▪ 지방청과 협력하여 지역별 혁신조달 제고 교육 실시	
중소벤처기업부	2	▪ 소관기관 협의를 거쳐 규제개선 유도 및 규제혁신 우수사례 홍보	
질병관리청	3	▪ 우수 지자체 잠복결핵감염 치료 · 관리 우수기관 포상 반영	
통계청	2	▪ 매뉴얼 개발, 통계작성 기술지원 등 지자체 통계확충 지원 강화	
통일부	1	▪ 평가결과 우수지자체 국고보조금 증액 지원	
행정안전부	22	▪ 지방공공요금 안정적 유지 관리 및 지자체별 현황 파악 ▪ 네거티브 규제전환 사례를 종합한 참고조례안 사례집 제작 · 배포 ▪ 지방보조금법 제정 등 보조금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환경부	5	▪ 우수지자체 포상으로 지자체의 자발적인 배출업소 환경관리 유도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지침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 온실가스 감축 부진기관 대상 맞춤형 기술진단 지원	

< 고용노동부 >		
지표명	정책환류 주요내용	비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율 (2-1-1-가)	○ 주요국정과제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 추진상황 점검, 현장방문 지도 등 대응책 마련 ○ 정규직 전환결정 지연기관 대상 전문컨설팅 실시('21년 39개소 실시)	
자치단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수행성과 (2-1-1-나)	○ 일모아시스템 참여자 정보 적시 입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도 개선 - 사업기간이 종료된 사업의 참여자 정보 입력이나 수정을 제한하여 참여자 정보를 보존하고 적시입력 의무 부여(완료) - 일모아시스템을 적극 활용한 담당자에게 일자리 유공 포상・표창 추천(완료) - 일모아시스템 사용자 인증 절차 간소화(완료) - 마이데이터 연계로 서류제출 간소화, 정보연계 기간 단축, 가구원 정보 자동입력 기능 도입(추진중) - 행안부 주민등록시스템 연계를 통해 주민번호 유효성 검사 도입(추진중)	
공공고용서비스 기관의 취업자 수 달성율 (2-1-1-다)	○ 각 공공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간 협업을 통한 취업자 수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협업 강화 등 지속 추진 - 금년에는 채용박람회, 구인·구직 만남의 날 등을 채용 행사를 가급적 지역 내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개최하도록 방식 개선 - 지자체 합동평가 달성에 각 전달체계가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평가 등 연계 추진 * '22년부터 지자체 합동평가의 평가지표인 알선 취업자 실적을 고용센터 기관평가에 추가 반영	
지방자치단체 수행·발주공사 사망사고자 수 감소 실적 (3-4-2-가)	○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포함될 수 있도록 평가지표 보완 * 사고사망자수 감소 실적('20년 실적 평가) → 사고사망자수 감소 실적, 수행·발주공사 안전관리계획 이행률, 지자체-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소통·협업 실적, 현장 안전보건공단 패트롤점검 연계율('22년 실적 평가) ○ 지방자치단체의 안전보건관리방법 향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산재예방 매뉴얼 마련·배포('21.12월)	

<table>
<tr>
<td>사회적경제
분야
우선구매율
(2-2-4-가)</td>
<td>
○ ’20년 지자체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평가 결과 법정 우선구매비율 0.6%를 달성하지 못한 광역 지자체 8개소 확인
- (사업방식 개선) 생산품 구매 확대를 위한 지속적 안내와 우선구매제도 인식 부족 해소를 위한 구매 담당자 교육 추진
▶ 우선구매제도 관련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지침을 개정・배포하고, 제품 정보가 담긴 온라인 카탈로그 발송 및 우선구매지원시스템(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홍보사이트) 이용을 독려하여 생산품 정보제공 확대
▶ 우선구매제도(제도 구성 및 추진체계, 구매방법 등 전반) 인식 개선을 위해 기관 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 영상을 제작 중이며 ’22년 3월 중 장애인고용공단 교육사이트에 탑재하여 온라인 교육 실시 추진(미이수 기관은 지속적인 안내를 통해 이수 독려)
- (지표 개선 추진) 우선구매 실적 인정 항목(기존: 물품, 용역 금액만 인정)에 ‘공사’금액을 추가하여 구매계약 검토 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장려 (’22년 실적부터 적용)
○ ’21년 우수 자치단체 포상 심사항목에 (예비)사회적 기업 제품 구매실적 신규 반영
- (예비)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율에 따라 배점 부여(2~10점)
- 우선구매율 = (‘20년 (예비)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 /’20년 총구매액)×100
<table>
<tr><td>기준</td><td>10% 이상</td><td>8% 이상</td><td>6% 이상</td><td>4% 이상</td><td>4% 미만</td></tr>
<tr><td>배점</td><td>10</td><td>8</td><td>6</td><td>4</td><td>2</td></tr>
</table>
○ 정부의 국정 과제(사회적경제 활성화)달성을 위해 2022년 (’21년 실적) 지자체 구매실적 인정기준 강화
<table>
<tr><td>구분</td><td>수정 전</td><td>수정 후</td></tr>
<tr><td>실적인정 기준</td><td>인증(지정)받은 해당연도 전체 구매한 실적 인정</td><td>유효한 인증(지정)기간에 구매한 실적만 인정</td></tr>
</table>
</td>
<td></td>
</tr>
</table>

< 공정거래위원회 >		
지표명	정책환류 주요내용	비고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율 (2-3-3-마)	○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지자체의 당면업무가 산적한 점을 고려하여 목표치를 수정(기존 195개 → 변경 171개)하여 평가부담 완화 ○ 우수 지자체 대상 포상금 지급(순위별 차등 지급)으로 지속적 인센티브 제공 ○ 규제개선 실적이 부진한 지자체의 개선이행을 독려하고, 지자체 담당자의 지표이해도 제고 목적으로 17개 시·도에 현장교육 실시	

< 교육부 >		
지표명	정책환류 주요내용	비고
대학 및 지자체 연계·협력 우수사례 (4-2-1-바)	○ '21년 평가 결과, 비수도권 청년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지역 정주를 유도하기 위해 교육·일자리·정주여건 향상 등을 위한 지역 내 협업 위원회 구성 · 운영 등 지자체별로 분산된 역량 결집 **노력이 증대**되고 있음 ⇒ 이에, 교육부는 지방대학 ·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분야에 공적이 있는 유공자를 발굴 · 수상하여 지역별 업무담당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있음 ※ '22년 관련 포상현황 : 30개 예정 -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유공 5개(계속) -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 유공 10개(계속)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유공 15개('21년 신설)	

< 국가보훈처 >		
지표명	정책환류 주요내용	비고
보훈정신 확산 우수사례(정성) (1-3-4-가)	○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보훈문화를 확산해온 비영리단체의 보훈문화상 후보자 발굴 ○ 도로·교량·건물 등에 보훈 인물 명칭 부여 사업에 대한 추진 절차, 방법 등의 습득 ○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사례(기록물 아카이브)를 참고하여 보훈 선양 기록물 관리사업 기획	

< 국가보훈처 >		
지표명	정책환류 주요내용	비고
국가유공자 특별채용률 (1-3-4-나)	○ (평가)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유공자 특별채용비율* 준수 실적 * 특별채용비율 : 특별채용 대상 일반직공무원 정원의 16%('21년 1% 상향) ○ (결과) 평가 대상 17개 지자체(특별·광역) 중 특별채용률 100% 이상 달성 기관 13개 기관('19년 11개 기관) * 신규채용 ('19년) 157명 → ('20년) 143명 ○ (문제점) 특별채용 대상 공무원 정원 감소*에 따른 일자리 부족 및 4개 지자체**의 특별채용률 미흡 * 시설관리직렬 및 방호직렬 정원 감소로 '19년~'20년 88개 일자리 감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전라남도 ○ (정책반영) 일자리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연차적으로 특별채용비율 상향* 및 지자체 간담회 등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특별채용 확대 추진 * 특별채용비율 : ('20년) 15%→('21년) 16%→('22년) 17%→('23) 18%	

< 국가정보원 >		
지표명	정책환류 주요내용	비고
관리적 정보보안 역량 개선율 (5-1-1-나)	○ 지자체의 분기별 자체평가 방식이 기관 보안취약점 개선을 위한 이행력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 ○ 院이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대상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에서도 분기별 자체평가 시행 제도 도입	
사이버위기대응 역량 개선율 (5-1-1-다)	○ 2020년 행안부의 노력으로 전담인력은 확보되었으나 전문성 부족 및 행정업무 과다로 인해 시스템 관리에 한계가 있어 주요 시스템의 관리자 권한탈취 등 중대 취약점이 지속 확인됨 ○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보안 수준 제고 및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실태 평가지표를 개선 ○ 院은 지자체 전담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최신 취약점을 포함하여 자체 보안점검 매뉴얼 제작 및 교육과정 신설(사이버안전훈련센터)을 추진중임	
기술적 정보보안 역량 개선율 (5-1-1-라)	○ 지자체의 예산확보 어려움으로 망 未분리에 따른 중요 업무자료의 대외유출 우려, 대민서비스 홈페이지 해킹 사고 발생시 파급영향이 커 랜섬웨어 감점 대상 확대 등 취약점 개선 미흡사례를 개선율 산정시 반영 강화	

< 농림축산식품부 >		
지표명	정책환류 주요내용	비고
빈집 정비 실적 (4-3-1-사)	○ 농어촌정비법을 개정('21.4.13)하여 지자체(시·군·구)의 빈집정비계획(5년 단위) 및 이행계획(1년 단위) 수립 의무화하여 체계적 빈집정비 기반 마련 ○ 체계적 빈집정비 위해 '21년 농촌빈집실태조사 결과를 「농촌빈집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21.8～12) ○ 빈집 및 유휴시설활용 우수사례를 5개소 발굴·홍보('21.9월) * 화순군, 합천군, 정선군, 영주시, 진천군 ○ 빈집정비 우수 지자체에 포상 실시('21.11) * 8개 도(道) 중 빈집정비 우수 시·군 담당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 수여	
농산물 직거래 실적 증가율 (4-3-2-가)	○ 지자체의 농산물 직거래에 대한 관심 제고로 전년 대비 농산물 직거래 증가에 기여 * 직거래실적 : ('19) 55,309억원 → ('20) 76,870억원	
쌀 적정 생산 및 곡물자급률 제고 (4-3-2-나)	○ 통계청의 벼 재배면적 통계조사 외에 지자체의 노력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목표치 설정방법 변경 * 지자체별 목표치 차등부여, 논타작물사업결과 평가항목에 추가 ○ 합동평가 달성률을 감안하여 농산시책포상금 지급 ○ 논타작물사업 등 우수 사례 공유('21.6.29.)	
GAP 인증농가 확대 (4-3-3-가)	○ GAP 인증 농가가 확대됨에 따라 GAP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21년 신규사업 추진 * GAP판로지원 : ('21)100백만원→ ('22)100백만원 ○ GAP안전성분석 지원사업 인증농가 비율에 따라 '22년 예산(2,825백만원) 차등 배정 ○ GAP인증 농가 확대 우수 지자체(담당자 등)에 대해 장관 표창	
반려동물 등록률 (4-3-3-다)	○ 동물의 유실·유기 방지를 위하여 '20년까지 2,322천마리의 동물을 등록 - (반려동물 등록) '19년 2,092천마리 → '20년 2,322천마리 - (유실·유기동물 구조) '20년 130천마리 ○ 동물판매업자가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신청 후 판매하도록 「동물보호법」 개정('20.2.)	

< 농림축산식품부 >		
지표명	정책환류 주요내용	비고
우제류 주요 가축전염병(5종) 발생 감소율 (4-3-3-라)	○ '20년 합동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농장 감염율 및 검사계획 등을 감안하여 '21년도 시·도 가축방역사업 예산에 반영 ○ 지자체 합동평가 미달 시도의 독려를 위하여 의견을 듣고 대책 마련 실시	
소, 돼지 구제역 예방접종 항체 양성률 (4-3-3-마)	○ 항체양성률이 저조한 취약 지역·농가 관리 강화 - 항체양성률 미흡 농가(과태료 부과 대상) 방역관리 지도·점검, 보강접종 및 혈청검사 실시 - 백신 구매 이력이 없거나 사육두수 대비 저조한 농가 대상 항체검사 및 방역실태 점검 실시 - 항체양성률이 저조한 하위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백신 공급 및 관리 적정 여부 등 특별점검 실시	
닭, 오리 가축전염병 발생률 (4-3-3-바)	○ '21년 지자체 가축방역시책 평가 지표에 반영(질병 발생 빈도에 따라 차등 점수 제공) ※ 지자체 가축방역 시책 평가(농식품부 자체 개별평가) - (인센티브) 성적 우수 지자체(시・군 포함)에 포상 및 혜택 부여(특별 포상금 지급 및 장관 상장 수여)	
검역병해충 예찰 및 방제 실적 (4-3-3-사)	○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검역병해충 예찰·방제를 충실히 이행하였고, 과수화상병(검역병해충) 확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21. 11월)하여 추진함 ○ **(제도개선)** 매몰중심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 - (예찰강화) 실시간 유전자 진단(RT-PCR) 활용 정밀예찰 및 정기 예찰 확대(발생중심 2~4회 → 전국 4회)하여 감염주 조기발견 및 방제추진 - (사전예방조치) 개화기 예측경보(Maryblyt)에 따라 예방 약제 살포 확대(만개기 2회 → 2~4회) 및 농가·농작업자 예방수칙 준수 실천 유도 - (매몰기준) 과도한 폐원 방지를 위한 방역권역 및 매몰기준 조정(4개 권역 → 2개) - (대응체계개선) 농진청의 총괄 기능 강화, 묘목장(종자원), 가로수·공원(시·도)에 대한 관리 주체 명확화 ○ **(법령 개정)** 지역·현장 중심의 예찰·방제체계 강화 - (일정) 입법예고(5.13~6.22) → 규제심사(5.25~10.1) → 법제처 심사중(10.1~) ※ '22년 상반기 국회 제출 예정 - (주요내용) ①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②거점대학 예찰·진단기관 확대, ③농가예방수칙 의무화, ④방제명령 미 이행시 강제집행, ⑤손실보상금 감액 근거 구체화 등 현장 신속 대응 체계 구축	

< 농촌진흥청 >		
지표명	정책환류 주요내용	비고
지속가능한 친화경 농업기술 실천농가 비율 (4-3-3-나)	○ 지자체 농업미생물 배양시설의 운영현황, 애로사항, 발전방안 등을 파악하여 우수사례 공유 및 기술보급 활용('21.1.) ○ 지자체 친환경 농업기술 실천(농업미생물 활용) 확대 현장컨설팅 실시('21.5~9, 36개 시군) * 미생물 품질관리, 우수균주 활용, 작물별 사용, 지역 간 정보교류 등 ○ 지자체 농업미생물 배양 실무교육('21.10, 252명)을 통한 안정적인 미생물 생산·공급으로 친환경 농업기술 실천 성과 제고 ○ 공익직불제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21.4.)으로 토양검정 업무 개선 * 토양특성이 특이한 지역(제주, 울릉 등) 재배토양의 특성 반영, 토양검정 업무 고도화를 위한 분석법 추가 ○ 토양검정을 통한 시비처방으로 적정시비를 유도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한 교육·홍보자료 지원('21.11.)	

< 문화재청 >		
지표명	정책환류 주요내용	비고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추진실적 달성도 (3-5-1-가)	○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실집행 제고로 내실있는 운영 도모 성과 창출 - 그간 실집행률이 60% 초반에 머물러 있었으나, 정부 합동평가 시행 후 집행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1년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실집행률 76% 달성(최근 3년간 70%대 유지) ○ 실집행 실적에 따라 '22년 국고보조금 차등 지원 - 실집행 부진 하위 5개 시·도(광주, 울산, 충북, 전남, 경북)에 대한 22년도 예산 편성시 부서 검토액 기준 감액 편성	

< 문화체육관광부 >

<table>
<tr><th>지표명</th><th>정책환류 주요내용</th><th>비고</th></tr>
<tr><td>공공저작물 개방 및 활용 지원 우수사례 (1-3-1-나)</td><td>

○ 지자체 공공저작물 개방지원 서비스 지원

- 개방지원 서비스 83개 기관 중에 28개의 지자체가 맞춤형 개방지원 서비스(컨설팅 및 교육 등) 지원하였고, 이를 통해 지자체 연계건수 증가(20년 833만건→21년 1,043만건)

* 지원기관 중 34%를 지자체 신청 및 지원

<table>
<tr><th>순번</th><th>수혜 지자체</th><th>순번</th><th>수혜 지자체</th></tr>
<tr><td>1</td><td>대전광역시</td><td>15</td><td>충청남도</td></tr>
<tr><td>2</td><td>부산광역시</td><td>16</td><td>경기도 부천시</td></tr>
<tr><td>3</td><td>경기도 고양시</td><td>17</td><td>전라남도 화순군</td></tr>
<tr><td>4</td><td>경기도 시흥시</td><td>18</td><td>충청남도 태안군</td></tr>
<tr><td>5</td><td>경기도</td><td>19</td><td>충청북도 진천군</td></tr>
<tr><td>6</td><td>부산광역시 동래구</td><td>20</td><td>충청남도 서천군</td></tr>
<tr><td>7</td><td>제주특별자치도</td><td>21</td><td>충청남도 홍성군</td></tr>
<tr><td>8</td><td>경기도 김포시</td><td>22</td><td>경기도 양주시</td></tr>
<tr><td>9</td><td>전라남도 목포시</td><td>23</td><td>전라남도</td></tr>
<tr><td>10</td><td>충청남도 천안시</td><td>24</td><td>충청북도 증평군</td></tr>
<tr><td>11</td><td>인천 미추홀구</td><td>25</td><td>남해군청</td></tr>
<tr><td>12</td><td>대구 남구청</td><td>26</td><td>전라북도 익산시</td></tr>
<tr><td>13</td><td>전라남도 영암군</td><td>27</td><td>세종특별자치시</td></tr>
<tr><td>14</td><td>대구광역시</td><td>28</td><td>서초구청</td></tr>
</table>

○ 개방 및 우수 활용지원에 원천이 되는 공공저작물 권리확인 및 처리, 고품질 공공저작물 확충 지원사업 지자체 중심으로 지원하여 활용 우수사례 기반 마련

* 사업대상 중 55%를 지자체 배정 및 지원

<table>
<tr><th colspan="2">지자체</th><th>권리 확인</th><th>권리 처리</th></tr>
<tr><td rowspan="5">권리확인</td><td>경기도</td><td>13만건</td><td>4천건</td></tr>
<tr><td>충청남도</td><td>10만1천건</td><td>3천건</td></tr>
<tr><td>대전시</td><td>10만2천건</td><td>1천7백건</td></tr>
<tr><td>시흥시</td><td>13만1천건</td><td>1천1백건</td></tr>
<tr><td>계</td><td>46만4천건</td><td>1만건</td></tr>
<tr><td>확충</td><td>제주도</td><td colspan="2">확충 : 966건</td></tr>
</table>

</td><td></td></tr>
<tr><td>문화누리카드 사업 예산 집행률 (3-5-1-나)</td><td>

○ ’20년 통합문화이용권 업무유공 장관포상 시, 예산 집행률 등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 공무원 35명 대상 장관표창장 수여 (‘21. 1월 표창장 전달)

※ ’20년 문화누리카드 발급·이용 실적 향상

<table>
<tr><th>연도별</th><th>’17년</th><th>’18년</th><th>’19년</th><th>’20년</th></tr>
<tr><td>발급인원</td><td>152만 명</td><td>159만 명</td><td>163만 명</td><td>175만 명</td></tr>
<tr><td>발급률</td><td>95%</td><td>97%</td><td>101.8%</td><td>102.5%</td></tr>
<tr><td>이용률</td><td>91%</td><td>91%</td><td>92.3%</td><td>91.9%</td></tr>
</table>

</td><td></td></tr>
</table>

‘문화가 있는 날’ 정책 추진 우수사례 (3-5-1-다)	ㅇ ‘문화가 있는 날’ 지자체 사업 참여 지역 확대 * 지자체 보조 지역특화 프로그램 확대 : ‘21년 28개 지자체 프로그램 → ‘22년 **35개 지자체 프로그램** 선정(’21.9월) 지원 ㅇ 문화가 있는 날 기획프로그램 추진 시, 지역 균형 고려 선정 * 지역문화콘텐츠 특성화 사업, 청춘마이크 등 문화가 있는 날 기획 프로그램 운영 시, 문화 향유 기회가 부족한 지역 안배 ㅇ 전년도 우수 지자체에 대한 사업 지속 및 포상을 통해 참여 유도 - ‘19년 문화가 있는 날 정책 추진 우수 지자체(대구, 대전, 강원, 경북) ‘21년 선정으로 사업의 계속성 유지 - ‘문화가 있는 날’ 대상 지자체 우수 공무원 포상 (매년 장관상 1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집행률 (3-5-6-가)	○ 지자체 스포츠강좌이용권 담당자 대상 정부포상(장관 표창) 시 집행률 반영(30%) ○ 집행률 우수 지자체 운영사례 공유, 애로사항 청취 등 워크숍 실시(5, 11월) ○ 집행률 부진 지자체 현장점검 실시(수시)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 우수사례 (3-5-6-다)	○ 지방체육의 지속적인 육성 지원을 통한 체계적인 선수 발굴 육성에 기여 - 지역특화종목(ex. 강원도-봅슬레이, 부산-요트) 등 기초 종목 , 동계종목 우선 지원 ○ 시도 및 시군구체육회 관계자들의 역량 강화 교육 지원으로 지방체육단체의 체육 행정력 강화	

< 법제처 >		
지표명	**정책환류 주요내용**	**비고**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1-3-1-라)	**ㅇ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의 사업방식을 개선한 사항** - (기존 현황) 법령에 따른 조례위임사항을 제때 마련하도록 하기 위해 법령 공포 시 위임사항의 개략적인 내용, 필수사항 여부, 시행일 등 조례 입안에 필요한 법제 정보를 포함하여 지자체에 통보(평균 2일 이내) ※ ’18년 149건 → ’19년 169건 → ’20년 165건→ ’21년 272건 - (개선사항) 기존의 조례 입안 참고사항 통보 제도를 활용하여 필수위임사항의 내용 및 위임취지, 자치법규 입안시 유의사항, 참고조례안 유무, 기타 지원제도 등 필수위임조례 입안 시 참고할 사항까지 선제적으로 안내 ※ ’21년 18건 **ㅇ 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입안 및 설계한 사항** - (지표매뉴얼 변경) ’21년 평가 결과 및 지자체의 의견을 바탕으로 ’23년 합동평가에서는 제때 마련 판단기준을 위임법령의 시행유예기간에 따라 구분하여, 공포일(시행유예기간 3개월 미만) 또는 시행일(시행유예기간 3개월 이상)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조례를 마련하도록 지표매뉴얼 변경	

< 병무청 >		
지표명	정책환류 주요내용	비고
사회복무요원 수요확대 실적 (3-1-1-마)	○ 사회복무요원 소집적체 해소를 위해 지자체 사회복지 업무지원 등 수요 확대 추진 필요 ○ 합동평가 지표 운영을 통해 21년도 배정 목표인원 19,903명 대비 106.7% 달성하여 총 21,226명 배정하여 **수요 확대 및 소집적체 해소**에 기여 ○ 특히, 보건복지부 협업을 통한 지자체 담당자 회의 개최 등으로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과 보건소의 **지자체 방역 및 소독을 위한 인력지원을 위한 사회복무요원 추가 배치실시로 코로나19 확산 대응능력 강화** ○ 평가결과에 대하여 각 시·도별 **부서장 성과평가 등에 반영**, 지자체 관심 및 원활한 협조 가능 ○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위하여 2023년('22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운영이 필요**	

< 보건복지부 >		
지표명	정책환류 주요내용	비고
지역사회서비스 이용률 및 예산 집행률 (2-1-2-가)	○ 차년도 예산 배분 시 인센티브(또는 패널티) 부여 ○ 지역사회서비스 현황 분석 및 신규사회서비스 개발, 제공 등 모니터링에 활용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율 (3-1-1-가)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율 평가를 통해 지자체의 의료급여 사후관리 처리율 제고 및 의료급여 재정 절감 도모 ○ 정부합동평가 결과를 '21년 의료급여사업 기관평가에 반영(30%)하여 지자체 및 유관기관(유공자) 포상 실시	
지자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확인조사 기간 내 처리율 (3-1-1-나)	○ 지자체의 위기가구 조사결과(복지서비스 지원 등)를 세분화하고 차등화 측정*함으로써, 장기적인 코로나19 상황에서 지자체의 적극적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독려하였음 * 단순상담 0.1점, 복지서비스 지원 1점 등 ○ 중앙에서 통보한 위기 가구(TOP-DOWN 방식)만 조사하던 방식에서, 지자체 자체적인 기준에 따른 복지취약계층 조사를 유도, 지원하였음	

<table>
<tr><th colspan="3">< 보건복지부 ></th></tr>
<tr><th>지표명</th><th>정책환류 주요내용</th><th>비고</th></tr>
<tr><td>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 실적
(3-1-1-다)</td><td>○ 전체 의료급여수급권자의 1인당 입·내원일수 및 진료비 평가를 통한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 도모
○ 정부합동평가 결과를 ‘21년 의료급여사업 평가에 반영(30%)하여 지자체 및 유관기관(유공자) 포상 실시</td><td></td></tr>
<tr><td>자활근로 참여자의 탈수급 및 취·창업율
(자활참여자 성공률)
(3-1-1-라)</td><td>○ 2021년도 자활사업 우수지자체 포상 선정 시 반영</td><td></td></tr>
<tr><td>노인일자리 목표 달성률
(3-1-2-다)</td><td>○ 지자체 합동평가의 사업별 목표달성률은 지자체 및 수행기관 평가 지표 중 하나로 반영
○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지자체와 수행기관에 인센티브와 장관 표창 등을 수여하고, 상·하위 그룹 간 비교 분석을 통한 부진기관에 대한 별도의 컨설팅 지원, 운영 우수 사례를 별도의 자료집으로 제작하여 현장 보급을 통해 전체적인 성과 향상 도모</td><td></td></tr>
<tr><td>저출산 대책 우수사례
(3-2-1-가)</td><td>○ 지자체 출산지원정책 우수사례를 전국 공유 및 확산
○ 각 지역의 인구특성과 생애주기별 정책 추진으로 저출산 대응 사업의 내실화 기여</td><td></td></tr>
<tr><td>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3-2-1-라)</td><td>○ 시도별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증감 실적을 반영하여 ’21년 국공립 장기임차 사업 시도별 물량(100개소)* 배정
* 민간·가정 국공립 장기임차 사업의 경우
○ 시도별 ’20년도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증감 실적을 반영하여 ’21년도 확충유공자 장관 표창 시도별 물량(35개) 배정*
<table>
<tr><td>서울</td><td>부산</td><td>대구</td><td>인천</td><td>광주</td><td>대전</td><td>울산</td><td>세종</td><td>제주</td></tr>
<tr><td>3</td><td>2</td><td>3</td><td>1</td><td>2</td><td>1</td><td>1</td><td>1</td><td>1</td></tr>
<tr><td>경기</td><td>강원</td><td>충북</td><td>충남</td><td>전북</td><td>전남</td><td>경북</td><td>경남</td><td>계</td></tr>
<tr><td>7</td><td>2</td><td>1</td><td>2</td><td>1</td><td>2</td><td>1</td><td>2</td><td>33</td></tr>
</table></td><td></td></tr>
</table>

< 산림청 >		
지표명	정책환류 주요내용	비고
산사태 예방·대응 체계 구축률 (4-3-1-가)	○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은 생활권 산사태취약지역에 우기 전(6월말)까지 사방사업을 집중 실행하여 산사태로 인한 피해 최소화에 기여 - 여름철 612.8mm('13~'19년 평균 강수량 551mm) 누적 강우가 작년 제외 최근 9년간 최다 강수량이었으며, 남부지역은 일강수량 300mm 이상을 기록하는 등 위험 기상상황 발생 * 7.6일 일강수량(mm) : 전남 고흥 331, 전남 해남 321, 전남 장흥 320 등 - 우기 전(6월)까지 사방댐, 계류보전을 집중 추진하여 '13~'19년 평균 대비 11% 많은 강수량에도 산사태 피해면적은 88% 감소함 * 최근 9년('13~'19년) 산사태 피해면적 124ha → '21년 26.8ha ○ 사방사업 예산지원 및 산사태방지 유공자 선정 시 합동 평가 결과를 평가항목에 반영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육성 달성률 (4-3-1-나)	○ 벌채 대상지에 대한 객관성 확보를 위해 임분의 수종 갱신 판정표 개정('21.6월) - 정성적 판정기준을 각 임분에 따라 수치화한 정량적 판정 기준으로 변경하는 등 객관성 확보 ○ 보다 환경 친화적 목재수확을 위한 기관·단체 의견수렴 등을 통해 친환경 벌채요령 운영요령 개선('21.9월) - 최대벌채 면적 축소(50ha→30ha), 수림대 존치 폭 확대(20m→40m), 연접지 벌채 제한 규정 신설 등 ○ 조림사업의 품질향상 도모 및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조림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개정('21.12월) ○ 기능별 숲가꾸기 현장 적용 기준 마련을 위한 공익숲 가꾸기 사업 추진 매뉴얼(안) 제시 및 시범사업 모니터링 추진('21.3월 ~ '21.12월) - 기능별 차별화된 사업추진을 위한 작업 방법 제시 - 지속적인 숲가꾸기 담당자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 * '공익숲가꾸기 업무 매뉴얼의 이해' 교육 동영상 보급('21.12월)	
임도시설 실적률 (4-3-1-다)	○ 제5차 전국임도기본계획('21~'30)에 따라 임도확충 및 관리 - 임도확충 계획(km, 누적) : ('20까지) 23,207 → ('30목표) 34,990 - 임도밀도 계획(m/ha) : ('20까지) 3.6 → ('30목표) 5.5 * '20년 말 민유 임도밀도 : 3.35m/ha(전국 평균 3.66) ○ 민유 간선임도 345km 신설로 탄소흡수량 78천t의 탄소 흡수에 기여 * 임도 1km 신설 시 탄소흡수량 기여 : 227tCO_2(국립산림과학원, '21) ○ 숲가꾸기, 목재생산 등 산림순환경영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 산림청 >		
지표명	정책환류 주요내용	비고
산불방지 달성률 (4-3-1-라)	○ 산불발생 주요원인인 **소각산불**(논·밭두렁 및 쓰레기소각)**발생 저감**을 위하여 **'소각산불 감축'** 및 **'소각산불가해자 검거율'**을 지표로 설정하여 **산불예방을 강화**하고 **산불피해를 최소**함으로써 성과창출 및 국민안전 확보 * 산불발생 추이 : (10년 평균) 474건 → ('20) 620 → **('21) 349** * 소각산불 추이 : (10년 평균) 137건 → ('20) 114 → **('21) 49** ☞ 전년('20년) 대비 **산불발생 건수 44%, 소각산불 건수 57% 감소** ○ ICT기반의 **산불예방 대응체계 구축** 및 **산불발생 원인별 사전예방 강화** * 산불드론감시단 등 첨단장비 활용하여 입체적 감시, 불법소각에 대한 부처 합동 및 주말기동단속으로 강력한 현장관리 ○ **스마트한 산불예방 및 진화체계 구축**으로 산불피해 최소화 *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을 활용하여 산불경로를 예측하고 진화전략수립 지원 * 영상·통신 등 첨단장비를 탑재하여 현장과 산불상황실간 산불상황 정보 제공을 위해 산불지휘차 기능개선 등 ○ **주·야간 산불단계별 상황판단 및 진화작전 추진** * (주간) 산불진화헬기가 촬영한 현장영상을 유관기관 및 상황실에 실시간 공유로 상황판단 지원 * (야간) 드론팀을 가동하여 야간산불 상황을 파악하여 진화전략 수립 ○ **산불예방 및 진화대응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 지지체 임차헬기 비용일부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 진화자원의 체계적 투입을 위해 산불단계별 국가동원령 체계 구축 * 산림인접지 소각행위 근절을 위한 산림보호법 개정(추진 중)	
산림병해충 방제 성과 달성도 (4-3-1-마)	○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방제성과 관련 지표 설정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본수 및 일반병해충 피해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 - 재선충병 : ('17.4) 99 → ('18.4) 69 → ('19.4) 49 → ('20.4) 41 → ('21.4) 31만본 - 일반병해충 : ('16) 87 → ('17) 77 → ('18) 81 → ('19) 70 → ('20) 63 → ('21) 61천ha ○ 피해지역의 확산 추세 등을 감안하여 병해충의 예찰 및 감독 강화를 위해 현장점검의 비중을 강화(기존 40% → 개선 50%)하도록 평가지표 개선	

< 산림청 >		
지표명	정책환류 주요내용	비고
소외계층 산림복지 바우처 확대 (4-3-1-바)	○ 소외계층의 산림복지서비스 이용확대에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지표 측정방식 개선 기존('20): 우선예약객실 지정 시설 수 / 제공자 등록 시설 수 개선('21): 우선예약객실 지정 객실 수 / 제공자 등록 시설의 전체 객실 수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지속적 확대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개소) : ('19) 190 → ('20) 229 → ('21) 255 ○ 소외계층에 대한 산림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한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수혜인원 확대 * 이용권 수혜인원(천명) : ('20) 40 → ('21) 44 → ('22) 50	
목재이용 우수사례 (4-3-1-아)	○ 목재산업분야 정책사업 확대와 우수사례 발굴 - 2022년도 목재산업분야 신규 사업 발굴 및 사업 확대 ·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5개소),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사업(1개소),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2개소) - 기존 목재이용 사업의 확대 추진 · 목재산업단지 조성사업 신규 1개소 추진 · 국산재 활용 촉진사업 확대(5개소 → 10개소) - 2021년도 공공분야 목조건축 우수사례 발굴 및 사례집 제작·배포('22.2월중)로 우수사례 보급·확산	
산림보호 단속 및 복구 실적 (4-3-1-자)	○ 업무 특성을 고려한 '산림피해 복구 실적' 지표 수정('21년 평가지표 반영) - 피해지 원상복구는 공소시효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사법처리 연도에 관계없이 피해지 원상복구 실적대상을 확대하여 평가지표의 적정성 확보 * (당초) 당년도 사법처리 건 중 복구실적 * (개선) 사법처리 연도 불문, 당년도 원상복구 실적 ○「2021년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에 따른 시기별·유형별 단속 및 감시체계 강화로 인위적 산림훼손 적극 대응 - 무단전용, 불법벌채, 도굴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건수(지자체) 전년 대비 206건 증가 * 산림단속 : ('19) 2,631 → ('20) 2,762 → ('21) 2,968건 - 악성 민원 유발 및 장기간 수사를 요하는 불법산지전용 사건처리 건수(지자체) 전년 대비 241건 증가 * 불법산지전용 단속 : ('19) 1,959 → ('20) 2,115 → ('21) 2,356건 ○검·경 출신 산림특별사법경찰 자문관 제도 운영(5명) - 산림단속·사법수사 자문, 수사지원, 실무교육 등을 통한 산림사법역량 강화 및 담당자 업무부담 완화 * 자문관 1인당 월평균 활동 건수 : 19건	

<산업통상자원부>		
지표명	정책환류 주요내용	비고
재생에너지 3020 및 수소경제 활성화 이행 추진 (1-2-2-가)	○ 높은 재생에너지 보급실적을 달성한 지자체에 산업부 장관 포상 수여 ○ 태양광에너지행사에 태양광 보급 확산 우수사례 공유 ○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수립시 지자체별 수소 충전소 구축현황, 수요-충전인프라간 불균형 지역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충전소 배치	

<식품의약품안전처>		
지표명	정책환류 주요내용	비고
식중독 발생 관리율 (3-3-3-마)	○ '20년 식중독 원인규명 및 발생요인 분석을 통해 '21년 식중독 예방·관리 종합대책 수립·추진 으로 백만명당 식중독 환자수 100명 수준 유지 * 백만명당 환자수 : ('19) 79명 → ('20) 53명 → ('21) 103명(잠정) ○ 지자체 합동평가 성과지표(식중독발생관리율) 결과를 반영하여 '21년도('20년도 실적) 식중독 예방관리 우수기관* 선정('21.11.18) - 선정 최우수기관(시도)는 범정부회의에서 식중독 예방관리 우수사례 공유 및 전파 * 최우수기관 : 3개 시·도 및 보건환경연구원(서울특별시, 강원도, 인천시보건환경연구원,), 우수기관 : 17개 시·군·구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 수혜 달성률 (3-3-3-바)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을 받는 소규모 급식소(100인 미만) 지원율 지속 증가 * ('18) 63.9% → ('19) 75.5% → ('20) 90.1%→ ('21) 98.6% ○ '20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228개 지자체에 설치되고 지원율이 90%이상 달성되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20.12.29개정, '21.12.30시행)**개정으로** 지자체의 **센터 설치 의무화** 및 **모든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의 센터 등록 의무화** ○ **지원율 제고를 위하여** '20년 실적 구간에 따른 지자체별 **'21년(실적) 목표치 차등 설정** * (90% 이상) 1% 상향, (80~90%) 3% 상향, (70~80%) 5% 상향, (70% 미만) 10% 상향	

< 여성가족부 >		
지표명	정책환류 주요내용	비고
경력단절여성 취업자수 목표 달성률 (2-1-3-가)	○ 시도별 취업지원 성과목표 관리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상황에서도 약 18만명('21년)의 여성이 새일센터를 통해 취업성공 * 구직상담 : ('19) 54.0만건 → ('20) 55.2만건 → ('21) 57만건 * 취업건수 : ('19) 17.8만건 → ('20) 17.7만건 → ('21) 18만건 ○ '19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던 여성고용률이 '20년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으로 급격히 하락하였으나, '21년에는 회복 추세 * 여성고용률(만15-64세) : ('19) 57.8%→ ('20) 56.7%→ ('21) 57.7%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율 (3-2-1-나)	○ 아이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동지표를 활용하고 있음 - 평가결과를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평가에 활용 - 아이돌봄서비스 개선방안 수립시 참고자료로 활용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 수는 서비스제공기관 평가지표에 포함되어 있으며, 매년 시·도별 국고보조금 예산 배정시 전년도 서비스 지원율 등 지표 결과를 참고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목표 달성률 (3-2-2-가)	○ 지역 사회의 공동체 돌봄 확대 추구를 위해 동 지표를 활용, 평가결과를 공동육아나눔터 신규 확대 설치 및 우수사례 공유 등 사업 확산 유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노력도 (3-2-6-가)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활성화를 위해 동 지표를 활용하여 학교밖 청소년의 자기계발, 사회적응, 학업복귀 등 사업성과 향상에 기여 ○ '21년 청소년정책 우수 지자체 정부포상 계획 평가항목으로 해당 지표를 설정하여 유공자 포상	
청소년안전망 운영 활성화 수준 (3-2-6-나)	○ '21년 청소년정책 우수 지자체 정부포상 시 가점 항목에 해당 지표를 설정하여 유공자 포상	
취약·위기가족 지원율 (3-4-3-가)	○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가족기능 향상 및 관계 개선을 위해 동 지표 활용 - 각 지자체 취약·위기가족 지원율을 참고하여 신규 사업 추진기관 선정 시 반영 ※ 사업 추진기관 확대 : ('19) 70개소 → ('20) 79개소 ○ 평가결과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을 통해 취약·위기가족 지원 사업 효과성 제고	

< 여성가족부 >		
지표명	정책환류 주요내용	비고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개선 노력도 (3-4-3-나)	○ '20년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 평가(이행점검) 시 다문화가족지원 사업 우수과제를 발굴 및 확산하여 관심 제고 ○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 성장 지원을 위한 다배움(취학전후 학습지원) 및 정서·진로취업 지원사업 신규 추진 ('22년 ~) ○ 결혼이민자가 직접 다문화 이해교육을 진행하는 '찾아가는 결혼이민자 다이음사업' 기간 확대(5개월→10개월) ○ 2022년('21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시 "지자체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지표를 추가하여, 지자체의 다문화가족 정책 역량 강화 및 관계기가관 간 협업 유도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율 (3-4-4-나)	○ 성별영향평가 **양적 팽창 위주의 관행 개선** 및 정부평가 실적 점검을 통해, **정책개선의 질적 성장에 크게 기여** ○ 지자체의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장려 및 공무원의 **정책에 대한 책무성 증진 효과** ○ 성별영향평가 정책 개선율 반영을 통해, **지역 성평등 정책 담당부서 업무 확장** 및 **여성의 정책 과정 참여 기회 확대** ○ 지자체 평가 결과의 주요실적 및 정책개선율 등을 반영하여 연간 **성별영향평가 우수 사례 지자체를 선정·포상** 및 지자체 홍보 기회 제공 ※ '21년 최우수 기관 표창-경상남도, '21년 우수 기관 표창 - 광주 북구, 서울 서대문구, 강원도, 경남 창원시, 경기 안양시 ※ '21년 성별영향평가 워크숍(연 1회)에 우수 지자체 등의 정책 개선 사례 공유 및 홍보의 기회 제공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개선 우수사례 (3-4-4-다)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아동의 어린이집 정보 등이 임신육아포털(아이사랑)을 통해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 등과 개선방안 논의('21.3월, 4회) 등을 통한 간담회 및 제도개선 논의 **- 가해자가 자녀의 어린이집 정보 등을 확인 할 수 없도록 가해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아동에 대한 정보관리 방식 개선(복지부 협업)** * 퇴소아동(가해자의 자녀) 정보를 가해자가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번호 대신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 <개선 전> ► **주민등록번호**로 관리 (가족인 가정폭력가해자가 피해아동 정보 조회 가능) → <개선 후> ► **전산관리번호**로 관리 (정보조회 불가)	

< 여성가족부 >		
지표명	정책환류 주요내용	비고
	○ **(성폭력 피해자 지원)** 현장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사용빈도가 높은 단계(물품)로 구성된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를 개선·제작하여 예산절감 및 피해자의 불편 최소화에 기여 * 성폭력 사건의 법의학적 증거가 될 수 있는 혈액·소변·DNA 등 채취를 위한 물품 **- 전체 구성품 중 사용빈도가 높은 7종의 단계(물품)으로 별도 구성한 소형 응급키트 제작으로, 현장에서 필요에 따라 대형(기존 12단계) 또는 소형(개선 7단계) 구분하여 활용유형 다변화에 기여** 응급키트유형 | 기 존: 대형(12단계) ※ 현장 필요 구분없이 대형만 활용 | 개 선: 대형(12단계), 소형(7단계) ※ 현장 편의에 따라 활용	

< 조달청 >		
지표명	정책환류 주요내용	비고
혁신지향 공공조달 우수사례 (2-5-1-가)	○ **혁신제품 지정 확대** - '19~'20년 2년 간 345개 제품 지정 → '22.2월 현재 959개 제품 신규 지정 ○ **수요자 중심 혁신조달 강화** - **(혁신제품 발굴 확대)** '혁신제품 스카우터'제도를 통해 기존 조달시장 밖에 존재하는 '혁신 유망주'를 선제적으로 발굴 * 스카우터 제도: 기술 전문가 등 20인을 스카우터로 위촉하고, '스카우터 데모데이'를 통해 35개 제품 발굴 - **(혁신수요 솔루션 연계 지원)** '혁신수요 인큐베이팅' 제도를 통해 기관·국민이 제기한 추상적인 혁신 아이디어의 구체화 지원 * 인큐베이팅 제도: 전문가 및 기관 담당자 등 수요개발단을 구성하여 추상적인 혁신수요를 구체화 ** 환경부와 협력하여 물순환·탄소중립·자원순환 등 과제 에 대해 총 19개의 구체적 과제 창출 ○ **혁신제품 구매 활성화** - **(전시회)** 나라장터 엑스포, 유관부처 행사 (정부혁신 박람회 등)에 혁신제품 전시관을 구성, 혁신제품 홍보 및 기관의 혁신제품 구매 활성화 촉진	

< 조달청 >		
지표명	정책환류 주요내용	비고

- **(인센티브 부여)** 기술혁신을 이뤄낸 혁신기업, 혁신제품 구매 등 혁신조달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기관과 개인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혁신지향 공공조달 유공 포상」 [기관(2개), 기업(2개), 개인(6명)], 「혁신조달 경진대회」 포상
- **(혁신조달 교육)** 기업·기관별 맞춤형 교육 컨텐츠 개발·제공(조달교육원 각 2회), 지방청과 협력하여 지역별 혁신조달 제도 교육(찾아가는 혁신조달 교육설명회) 실시
- **(간담회 등)** 혁신조달 확산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위한 지역별 간담회 실시, 혁신조달 정책 홍보 등을 위한 혁신매거진 발간(8월, 10월, 12월 발간)
- **(시범구매 확대)** 혁신제품을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하여 적정 수요기관에 제공하고, 시범사용 후 그 결과를 평가 및 피드백하여 혁신기업의 판로개척 지원 및 기술혁신 촉진에 기여
  * (사업예산) ('19)24억원 → ('20)293억원 → ('21)445억원 → ('22) 465억원
  * (매칭·계약) '21년도 3차에 걸쳐 179개 제품(346개 기관), 약 516억원 규모 매칭

○ **혁신조달 성과 확산**

- **(MOU체결)**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혁신조달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전 공공부문에 혁신조달 분위기 확산 노력
  * 경남·전북·광주·제주·부산 등 15개 지자체와 지역 내 혁신조달 성과 확산 및 기반 강화, 우수 창업·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MOU 체결

○ **혁신구매 목표제 강화**

- 기관별 물품구매액의 1.2%를 혁신제품 구매에 활용하고, 달성도를 기관평가에 반영
  * (혁신구매목표액) ('20) 기관별 물품구매액의 1%(일률) → ('21) 기관별 물품구매액의 1.2%(평균)

<혁신구매목표율 반영 현황(2021)>

구분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					총계
				계	광역	기초	교육청*	그 외	
목표율	1.6%	1.8%	1.6%	0.7%	0.8%	0.8%	0.4%	0.8%	1.2%

< 조달청 >		
지표명	정책환류 주요내용	비고
	○ **혁신조달 플랫폼 기능 강화** - 혁신수요창출, 혁신제품 판로지원 등 혁신조달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지원하는 전용플랫폼으로 기능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개선 * (혁신제품전용몰) 959개 지정 제품 중 628개 등록 * (기능개선) 인큐베이팅 오픈('21. 10월), 혁신제품 지정증서 통합관리서비스 제공('21. 12월), 고객편의 제고와 개인정보 보호('21. 9월), 데이터품질 향상('21. 10월)	

< 중소벤처기업부 >		
지표명	정책환류 주요내용	비고
중기부(옴부즈만) 지방 규제애로 발굴 개선 실적 (2-3-3-라)	○ 기업 규제애로 발굴과제에 대하여 소관기관 협의를 거쳐 규제개선 유도 및 규제혁신 우수사례 홍보 ○ 우수지자체 담당자에 대하여 장관표창 정례수여	
신기술제품 우선구매율 (2-5-2-가)	○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개선 상항 : 일부 실태조사('20년) → **전 지자체 실태조사**('21년) ○ 평가결과에 따른 포상 반영 : 중기부장관 표창(**충남 천안시**) ○ 평가 후 컨설팅 : 공문 발송(**공공구매 시정 권고**)	

< 질병관리청 >		
지표명	정책환류 주요내용	비고
잠복결핵감영자 치료 실시율 (3-1-4-가)	○ 국가결핵관리사업의 최종목표인 결핵퇴치를 위해 결핵 발생의 선제적 예방의 일환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진('17년~'19년) 및 치료('15.7월~)를 국고지원 하였음 ○ 잠복결핵감염 치료의 접근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잠복결핵감염자 치료비 지원사업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하여 진행하였고('15.7월~'21.6월), 잠복결핵감염 치료비 지원재정을 산정특례로 전환('21.7월~) ○ 잠복결핵감염자 치료 실시 유도 및 관리 강화를 위해 '잠복결핵감염치료의료기관' 확대 구성하고 진료의사 교육을 일원화하고 의무를 강화 ○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잠복결핵감염 치료·관리 우수기관 포상 반영	

< 질병관리청 >		
지표명	정책환류 주요내용	비고
결핵환자 접촉자 잠복결핵감염 검진율 (3-1-4-다)	○ 결핵의 가족 및 직장 내 전파 방지를 위한 결핵환자 접촉자의 잠복결핵감염 검진율 향상('19년 80.9%, '20년 96.2%) * 가족접촉자 잠복결핵감염 검진율('19년 78.9%→'20년 94.0%), 결핵역학조사 잠복결핵감염 검진율('19년 83.9%→'20년 96.2%) ○ 가족접촉자 검진의 접근성·편의성 제고를 위한 검진 의료기관 확대 및 필수이수교육을 통한 질관리 강화 * 검진의료기관('19년 539개소→'20년 553개소→'21년 578개소) ○ 행정정보공동이용망과의 연계를 통한 결핵환자의 가족 접촉자 등록체계 개선 시범사업 운영('21.1～6월) * 가족접촉자 2,379명(17.7%p) 증가(결핵환자 독거율 '20.上 53.1% →'21.上 35.4%) ○ 와상환자 또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 대상으로 원활한 검진을 위해 현장대응차량 내 이동식 흉부방사선 촬영 장비 도입('21.8월) ○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유공자 포상 추가 반영	
역학조사의 완성도 (3-3-3-다)	○ 감염병관리 유공자 포상 심사 평가지표로 활용	

< 통계청 >		
지표명	정책환류 주요내용	비고
지역통계 확충 실적 (4-2-1-라)	○ **표준매뉴얼 개발, 통계작성 기술지원 등 지자체 지역통계 확충 지원 강화** - 지역 확산이 필요한 통계를 발굴하고 표준매뉴얼 개발 및 보급	

연번	2019	2020	2021
1	일자리종합 실태조사	농업실태조사 (시범)	농업실태조사
2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	어가실태조사(시범)	전통시장 및 상점가조사
3	청소년 사회환경조사	장애인통계	경력단절 여성등의 경제활동실태조사
4	여성통계	지자체 기본통계	
5	다문화가구통계		

- 기술지원, 생산대행 등을 통해 지자체 지역통계 작성 지원 강화
  * (지역통계 작성지원: 265건('18년)→ 201건('19년)) → 220건('20년)→ 231건('21년))

< 통계청 >		
지표명	정책환류 주요내용	비고
	○ **지역통계 협의체 운영 활성화로 지역통계 개발·지원 등 의견수렴** – [1]지역통계발전협의회, [2]지역사회지표협의회, [3]권역별 지역통계발전협의회 운영 * 1) 시도 통계담당관, 중앙부처 부서장 등, 2)지자체, 외부 전문가 등 3) 지방청 주관으로 지자체, 지역연구원, 전문가 등이 참여	
지역통계 활용 우수사례 (4-2-1-마)	○ 지역통계 관련 소식지 「전국통계자랑」 배포를 통해 지자체 주요 특화통계 및 활용 우수사례 공유(분기별 1회) ○ 지역통계 생산 및 정책활용 사례 공유 및 확산을 위해 지역통계 공모전을 실시하고 우수 지자체 대상 포상 실시(9개 지자체)	

구분	지자체	우 수 사 례
광역 (3개)	인천	효율적인 폭염대책 마련을 위한 취약지역 선정 빅데이터 분석
	대구	코로나19 대응의 숨은 일꾼 통계 빅데이터로 D-방역 선도
	제주	통계청-제주도의 콜라보, 청년정책 숙제를 해결하다
기초 (6개)	서울 동작구	코로나19 지역경제 영향 분석
	부산 연제구	데이터 행정을 선도하는 도시 연제
	광주 광산구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통계조사 및 우리 동네 상권정보 서비스
	강원 원주	지역통계를 활용한 '기업하기 좋은 경제도시 원주' 만들기
	충북 청주(최우수)	통계 분석자료를 활용한 든든한 정책 발굴
	경남 창원	경제지표조사로 창원 플러스성장을 더하다!

< 통일부 >		
지표명	정책환류 주요내용	비고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지원노력도 (5-2-3-가)	○ 합동평가 우수 지자체 국고보조금 증액 지원(4개 시도) ○ 지표를 실행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 지원에 실질적 기여	

<table>
<tr><th colspan="3"><행정안전부></th></tr>
<tr><th>지표명</th><th>정책환류 주요내용</th><th>비고</th></tr>
<tr><td>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실적
(1-2-2-가)</td><td>○ 자원봉사 참여문화 확산을 위한 「2021년 자원봉사 진흥 시행계획」 수립('21.5월)
- 전 지자체 시행계획 수립에 참여,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 및 온라인·비대면 자원봉사 인프라 확충 등 자원봉사활동의 효과적 지원을 위한 내용 반영
※ 11개 부처, 17개 광역지자체, 5대 분야 총 440개 과제
○ 민간 중심의 자원봉사 지원 체계 확립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개정 추진
- 자원봉사센터 민간화, 중앙센터 설치, 지역센터 공유재산 지원 확대 등 근거 마련
※ '21.5.12. 법안소위 회부, 추가발의 등 국회 통과를 위한 노력 지속
○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방식 다양화
- 자원봉사자 사기진작·격려를 위해 우수 자원봉사자 및 기관(단체)에 대한 포상 수여(총 243점)
- 자원봉사 참여 촉진을 위해 자원봉사센터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포상금 지원(총 80백만원)
○ 자치단체에 국고보조금을 교부하여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 자원봉사활동 중 사고예방 및 상해보상 체계 강화를 위해 자원봉사종합보험 가입 국고보조(13.9억)
- 자원봉사센터 역량 강화 및 전문성 확충을 위한 코디네이터 인건비 국고보조(75.5억)</td><td></td></tr>
<tr><td>4차 산업혁명
대응 우수사례
(1-3-1-가)</td><td>○ 정보화 사업은 총 10,950개 사업, 총 2조 2,955억 7천 8백만원으로, <u>전년 대비 사업수는 166개(1.54%), 예산규모는 174,146백만원(8.21%) 증가</u>
< 지방자치단체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총예산 >
(단위 : 개, 백만원)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2020(A)</th><th colspan="2">2021(B)</th><th colspan="2">증감(B-A)</th></tr><tr><th>사업수</th><th>예산</th><th>사업수</th><th>예산</th><th>사업수</th><th>예산</th></tr><tr><td>지자체</td><td>10,784</td><td>2,121,432</td><td>10,950</td><td>2,295,578</td><td>166</td><td>174,146</td></tr></table>○ 지방자치단체 자체 예산(시·도비, 시·군·구비)의 비중이 77.65%(1,782,613백만원)에 달하여 절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정보화 사업 중 지능정보기술이 포함된 사업은 2,215개, 예산은 약 1,127,391백만원으로, <u>전년 대비 약 117,355백만원 증가(11.62%)해 편성함</u>
- 사물인터넷, 모바일 등 대민서비스에 활용하기 용이한 기술 위주 투자</td><td></td></tr>
</table>

<행정안전부>

지표명	정책환류 주요내용	비고

< 2021년도 지능정보기술 투자 규모 >

(단위 : 개, 백만원, %)

구 분	2019 결산(A)		2020 예산(B)		2021 예산(C)		증 감(C-B)	
	사업수	예산	사업수	예산	사업수	예산	사업수 (증감율)	예산 (증감율)
합 계*	517	148,609	789	301,257	1,011	352,189	222 (28.14)	50,932 (16.91)
클라우드	417	188,740	538	226,481	625	226,468	87 (16.17)	△13 (△0.01)
빅데이터	484	408,712	674	501,122	759	563,285	85 (12.61)	62,163 (12.4)
사물인터넷	803	508,486	981	612,418	1,034	700,911	53 (5.4)	88,494 (14.45)
모바일	784	122,510	957	178,244	1,067	261,032	110 (11.49)	82,787 (46.45)
인공지능	204	201,496	292	306,050	306	354,819	14 (4.79)	48,768 (15.93)
블록체인	10	3,634	17	7,913	18	10,280	1 (5.88)	2,367 (29.92)
5G	66	120,886	128	190,859	86	178,212	△42 (△32.81)	△12,647 (△6.63)
실감기술	26	20,864	39	61,679	41	48,556	2 (5.13)	△13,123 (△21.28)
기타	12	6,658	13	35,727	14	26,969	1 (7.69)	△8,758 (△24.51)

* 여러 가지 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이 있어 총 사업수 및 예산은 단순 합보다 적음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 (1-3-1-다)

○ **빅데이터 포털 '혜안' 분석서비스 확대 제공**

- 지자체의 빅데이터 분석을 지원하기 위해 혜안 포털에 온라인분석 서비스 2종* 및 분석참조모델 6종** 추가

  * 주차난 완화 분석, 공공와이파이 분석 ('21.3월)

  ** 초등돌봄 수요예측모델, 어린이 교통안전, 2급 감염병 분석 등 6종('21.3월)

○ **데이터 활용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진행**

- '21.7월～10월, 빅데이터 담당부서 및 현업부서 공무원 대상 데이터 역량강화 전문교육(24H) 추진

  * (기획·활용교육) 데이터 전략의 이해·수립 등, 4회 개최
  (분석·시각화교육) 분석·시각화 도구 활용 등, 3회 개최

- '21.9월, 기관의 데이터 역량수준 진단 및 결과 분석 등 데이터 활용 역량강화 컨설팅 추진

  * 14개 신청기관 중 광역 1개, 기초 2개 선정(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서구, 경북 포항시)

○ **빅데이터 이용활성화 유공 장관표창 추진**

- '20년 지자체 합동평가 실적을 반영하여 2개 기관* 담당자에 장관 표창 수여

  * 경기도 양주시, 경상남도 남해군

<행정안전부>		
지표명	정책환류 주요내용	비고
지역물가 안정관리 실적 (2-2-1-가)	○ 정부 물가안정 기조에 대응하여 지방공공요금 안정적 유지 관리 및 지자체별 현황 파악 ○ 지방물가 안정관리 우수자치단체 평가 기초자료 활용	
지자체 사회성과 보상사업 기반 조성 우수사례 (2-2-4-나)	○ 지자체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제도화를 통한 확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 제정을 국회와 논의 중에 있음	
중앙부처 건의과제 규제 발굴 개선 실적 (2-3-3-가)	○ 신산업 규제혁신 방식인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先허용-後규제)'전환 사업을 추진하고 그 실적을 평가한 결과 '20년 478건에서 '21년 563건으로 118% 개선 ○ 네거티브 규제전환 개선 사례를 종합한 참고조례안 사례집 제작·배포('22.2월)하여 네거티브 전환 사례 공유·확산 유도 ○ 반기별(상·하반기) 규제개선 건의과제 발굴을 통해 발굴 과제는 즉시 부처와 협의함으로써 규제혁신의 적시성 확보 ○ 현장 방문, 서면 등을 통해 규제를 발굴하고 규제개선 수용률 제고를 위해 쟁점조정회의(국무조정실 주재) 및 지역토론회 적극 활용 ○ 지자체 수요를 받아 지자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에 대한 심층 분석 및 규제해소를 위한 현장지원	
행태개선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실적 (2-3-3-나)	○ 매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 5건을 선정하여 언론보도, 카드뉴스 제작 및 사회관계망 홍보, 범지자체 사례 공유·확산 도모 ○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 평가지표에 해당 실적을 반영(170점/1,000점) ○ 지방규제혁신 컨설팅 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적극 참조하여 규제개선 과제 발굴 당부 등 과제 발굴 및 성과 평가에 적극 활용	
지자체 자율적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투자 우수사례(정성) (2-3-3-다)	○ 기계류, 수도관류 등 조달물자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전문기관 검사비용을 줄이고(경기 안양시), 지역의무 공동도급 공사 발주시 시공품질평가 점수에 대표사 점수를 반영하는 예외규정(부산시)을 신설하여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대형공사 입찰기회를 확대하는 등 지자체의 자율적 규제완화를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행정안전부>		
지표명	정책환류 주요내용	비고
지방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율 (3-3-1-가)	○ '22년 지방이양 사업 추진지침 배포 시 평가결과 우수 지자체 사례 포함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률 감소율 (3-3-1-나)	○ '22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수립지침 및 지방이양 사업 추진지침 배포 시 평가결과 우수 지자체 사례 포함	
민방위경보 운영관리 개선 (3-3-2-가)	○ **(지표목표)** 민방위경보통제소 운영관리 개선으로 365일 24시간 중단없는 경보상황 관리 ○ **(개선사항)** 전국 시도 경보단말 평균 장애시간을 '20년 0.369→ '21년0.174 로 단축 ○ **(목표달성)** '21년 기준(0.557) 대비 17개 시도 달성 ○ **(기대효과)** 시도 경보통제소의 안정적인 경보장비 운영 관리 노력 유도로 민방위경보 발령 태세 확립 및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확보율 (3-3-2-나)	○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확보율 상향 추진** - **(현황/문제점)** 법적임무 수행 대원의 필수 보호장비인 화생방 방독면의 목표 확보율(80%) 미달성*(64.6% '21.1.10. 기준) * 17개 시도 중 목표 확보율 달성 : 4개 시도(강원, 충북, 전남, 경북) ※ 확보추이 : '17년 29.7% → '18년 37.6% → '19년 52.8% → '20년 64.6% - **(추진사항)** '20년 정부 합동평가에 관련 지표 반영, 지자체 자체사업(계획 6.4만개)으로 18만개 확보(계획 대비 11.6만개 추가 확보) ▶ 총 확보량*(25.4만개) 중 합동평가 물량 60%(18만개) 차지 * 국고보조 12.6만, 합동평가 18만, 직장대 1.4만, 폐기 6.6만 ※ 중앙 및 지자체 공동의 노력을 통한 시책 추진 - **(개선 및 환류)** • **(부진개선)** 확보율 '20년64.6%→'21년72.4%, 7.8% 상향 ▶ 합동평가를 통해 전체 확보율 4.7% 상향 기여 ▶ 목표 확보율(80%) 달성 시도 : 4개 → 8개* *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 • **(사업방식 개선)** 확보율 취약지역 식별로 국고보조사업 우선지원 대상 재조정(13개 → 9개 시도) ▶ 목표 확보율 미달성 9개* 시도 중심 지원(10만개)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세종, 경기, 경남	

<행정안전부>		
지표명	정책환류 주요내용	비고
장애인공무원 신규채용 실적 (3-4-3-가)	○ 지자체 균형인사 확대를 위해 '21년도 합동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균형인사 우수기관(유공자) 선정및 표창 수여 (인사혁신처 합동) * '21년도('20년 실적) 균형인사 우수 지자체 : 경남, 광주, 전북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목표 달성률 (3-4-4-가)	○ 여성관리자 보직 확대를 위해 '22년도 지자체 합동평가 ('21년 실적) 지표에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의 주요부서* 임용 비율 반영 * 인사·감사·기획·예산 및 실·국 주무과 등 직무의 중요도와 난이도가 높아 공무원의 역량개발과 경력발전을 위해 선호되는 부서를 의미 ○ 지자체 균형인사 확대를 위해 '21년도 합동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균형인사 우수기관(유공자) 선정및 표창 수여 (인사혁신처 합동) * '21년도('20년 실적) 균형인사 우수 지자체 : 경남, 광주, 전북	
테마별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율 (4-1-1-나)	○ 합동평가 지표(지자체 자치법규 정비율 실적)를 반영하여 자치법규 정비 유공자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실시 ○ 자치법규 정비 사례집을 발간하여 정비 사례를 공유하고 교육자료로 활용	
보조금 부적정수급 근절 및 환수 노력(정성평가) (4-1-2-가)	○ **보조금의 효율적 관리 및 보조금 부정수급 적극 대응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 「지방보조금법」 및 동법 시행령 제정('21. 7. 13. 시행),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개정('21. 9. 6. 시행) 등 ○ **보조금 컨설팅을 통한 중앙-자치단체, 자치단체 간 상호 협력 체계 구축** - (내용) ①보조금 부정수급 예방·근절을 위한 현안 공유, ② 맞춤형 개선방안 제시 및 우수시책 공유·전파 등 ※ ('20년) 충북(8월), 부산(9월.), 울산·경남, 광주·전남, 대전·세종(12월) ('21년) 충북(6월), 서울(7월), 경북(8월), 경기(11월) ○ **내부고발 및 주민의 적극적인 신고 유도를 위한 부정수급 신고 및 포상금제도 온·오프라인 홍보** - (오프라인) 포스터·리플릿 제작·배포, 운영매뉴얼 배포 - (온라인) 카드뉴스 제작·게시, 제도 안내 유튜브 제작·송출	

<행정안전부>		
지표명	정책환류 주요내용	비고
지방예산낭비 방지 및 절감우수사례 (4-1-2-나)	○ 지방예산낭비 신고 우수 사례집* 발간 * 지자체 처리 타당한 신고 포함 ○ 지방예산낭비 신고 유공자 표창 : 16점(지자체 공무원 11점, 민간인 5점) ○ 지방예산낭비 신고 우수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18명, 1천만원)	
도로명 안내표지 방식으로 도로표지판 정비 (4-2-1-가)	○ 도로명판의 무분별한 설치로 인한 도시미관 저하, 안전사고 발생 방지 및 도로명주소 활용 활성화 - 도로표지판을 활용한 도로명 안내를 통해 최소 소요량의 도로명판만 설치*, 관련 예산 절감 * 설치·관리: 도로표지판(도로관리 부서), 도로명판(도로명주소 부서)	
도로명판 확충 (4-2-1-나)	○ '21년('20년 실적) 합동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22년 시범사업 추진 ※ '19년 90만개(60%) → '20년 99만개(66%) → '21년 107만개(71%) - 최소 소요량 100% 달성한 지자체 중 3개를 선정하여 조명·야광형 범죄예방(셉테드) 주소정보시설 시범 설치를 위한 특교세 신청 ○ 합동평가 결과 '주소정보 업무 유공' 포상 지자체 선정 시 반영	
상세주소 부여실적 (4-2-1-다)	○ 상세주소 부여 36,825건 중 32,327건(88%)은 지자체장의 직권 부여로, 상세주소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된 것으로 분석 ○ '21년('20년 실적) 합동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22년 상세주소 부여 목표 산정 및 확대 - 주민등록표 상 기타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단독·다가구 주택을 부여 대상으로 관리,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부여 대상으로 포함 * 주민등록표에 기재한 '호수'로, 공법적 주소로 사용할 수 없음 ○ 평가 결과 '주소정보 업무 유공' 포상 지자체 선정 시 반영	
옥외광고물 정비 및 활용 우수사례 (4-2-1-사)	○ 수거한 불법현수막 등에 대한 재활용사업 지자체 지원 - 마대, 시멘트 소성연료, 우산 등 22개 지자체 재활용사업에 156백만원 지원 ○ 불법광고물 근절 우수사례 지자체 공유 - 매년초 수립하는 불법광고물 정비방안에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등 우수사례 포함하여 지자체에 통보	

<행정안전부>		
지표명	정책환류 주요내용	비고
충무계획 실효성 확보 (5-1-1-가)	○ 지자체 충무계획담당자 대상 교육*시 우수사례(4건) 내용 공유 - '21.8.10~8.26, 300여 명(지자체별 자체 교육 실시) * 2022년도 충무시행계획 수립 참고자료 송부('21.8.3) ○ 지자체별 충무계획 개선과제 발굴 및 보완 추진(17개 시도, 174건) ○ '21년 비상대비정책 발전 유공 표창 시 반영 - 장관 표창 수여(4 : 광주1, 충북1, 충남1, 경북1)	

< 환경부 >		
지표명	정책환류 주요내용	비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위반율 (3-3-3-아)	○ 배출업소 환경관리 우수 지자체(공무원)를 선발・포상하여 지자체의 자발적인 배출업소 환경관리 유도 및 역량 강화 - '21년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포상* 및 포상금 지급** * 대통령표창(우수 광역지자체 1점), 국무총리표창(우수 기초지자체 1점, 민간인 1점), 장관표창(우수지자체 4점, 우수지자체 담당공무원 9점) ** 광역지자체(2개 기관, 총 1,500만원), 기초지자체(25개 기관, 총 5,200만원) ○ 단속업무가 소홀한 지역(지자체)에 대한 집중단속과 적극적인 시료채취·분석(대기·수질·폐기물)으로 환경오염 사전 예방 및 경각심 고취 - '21년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 위반율 최하위 지역 등 환경관리가 미흡한 지자체를 선정하여 중앙환경단속* 추진(197개소 점검 168개소 적발, '21.6.7~6.11, 12.6~12.10) * 환경부 주관, 7개 유역(지방)환경청(환경경감시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으로 반원 구성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리 우수사례 (3-3-5-가)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지침개정(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신고, 특수마대 규격·개수 제한 등)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중(구체적 처리 기준 마련 등)	

< 환경부 >		
지표명	정책환류 주요내용	비고
주민 1인당 재활용품 분리수거량 및 수거 증가량 (3-3-5-가)	○ 종이팩 분리배출 확대를 위해 '22년부터 일반팩과 멸균팩을 구분하여 표시하고 분리배출토록 제도 개선[「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개정('21.7.9)] ※ 종이팩 분리수거량 : 0.069kg/인('16년)→0.108kg/인('20년) ○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 대상 조명품목에 형광등 외 발광다이오드조명(LED)추가(「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 '21.11.23) ※ 조명시장이 변화(형광등→LED)되는 과도기적 상황을 고려하여 '22년('21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형광등 재포함	
온실가스 감축 노력의 적극성 및 달성률 (3-3-7-가)	○ (국고지원 지표 활용) ① 공공부문의 탄소중립 모델 대상지(5개 유형별 1개소) 선정시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평가지표로 활용, ② 연도별 온실가스 권장 감축률('20년 30%)를 달성하지 못한 기관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설치 및 건물의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국고지원 사업 추진('22년 신규, 국비 5억 이내)\ ○ (우수사례 공유/포상) 공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감축 노하우를 공유하고, 감축 우수기관(15개 기관)에 포상·표창 등 인센티브 제공('21.12) ○ (교육)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신규 편입 기관 및 온실가스 감축 부진기관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 실시(총 2회, 607명) ○ (컨설팅)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부진 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기술진단 지원('21년 25개 시설)	
탄소포인트제 참여가구수 증가율 (3-3-7-나)	○ **탄소포인트제 지자체 담당공무원 워크숍 개최(매년)** - 탄소포인트제 운영 추진현황, 성과공유 - 제도 발전을 위한 지자체 의견 수렴 및 활성화방안 공유	